

지역문화 Co-Creation 허브로서 뮤지엄

Museum as a Regional Cultural Co-Creation Hub

5.17. SAT

주최

한국박물관협회 THE KOREAN MUSEUM ASSOCIATION

ICOM Korea Rep.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GA-MYEON 자연문화재단

SIGONGtech

이지문화예술연구회



지역문화 Co-Creation 허브로서 뮤지엄

Museum as a Regional Cultural Co-Creation Hub

5.17. SAT

주최

한국박물관협회

ICOM Korea Branch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GA-HYEON
자연문화재단

SIGONGtech

이지문화예술연구회

제19회 한국박물관국제학술대회
The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Museum Association

급변하는 공동체와 박물관의 미래
The Future of Museums in Rapidly
Changing Communities

지역문화 Co-Creation 허브로서 뮤지엄

Museum as a Regional Cultural Co-Creation Hub

이지예술헌화연구
2025년 정기학술회의

목 차

1. 개요(진행순서)	
2. 발표문	
1) 남평주조장, 10년의 성과와 과제 윤태석 Ⅵ 남평문화주조장 예술감독	2
2) 지역 주권의 시대, 대학박물관의 나아갈 길 김나영 Ⅵ 삼육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4
3) 지자체 미술관 건립과 운영의 성공 전략 - 구리시립미술관의 정체성 모색을 중심으로 - 손정화 Ⅵ 구리시청 학예사	20
4) 공공문화시설이 지역문화에 미치는 영향 - 한강문화관 사례를 중심으로 - 양은희 Ⅵ kwater 운영관리	30
5) 경력단절 여성의 지역 예술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문화기획자로의 전환 - 송파문화재단의 '아트나바다'와 '송들바람' 사례 를 중심으로 - 신수하 Ⅵ 독립기획자	39
6) 과세부터 탈세까지: 미술품과 박물관을 둘러싼 조 세 제문제 -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을 중심으로 - 김별다비 Ⅵ 경정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50

이지예술문화연구회

2025년 정기학술회의

학 회 명	이지예술문화연구회
장소 시간	국립중앙박물관 제2강의실 2025년 5월17일(토요일) 16:00 ~ 18:00
일 정	내용 / 발표자
주 제	(국문) 지역문화 Co-Creation 허브로서 뮤지엄
	(영문) Museum as a regional cultural co-creation hub
사 회	[사회자] 박성환 이지예술문화연구회 총무, 더랩씨 대표
16:00-16:05	[인사말] 심영옥 이지예술문화연구회 회장, 경희대학교
16:05-16:20	[제1발표] 남평주조장, 10년의 성과와 과제 윤태석 남평문화주조장 예술감독
16:20-16:35	[제2발표] 지역 주권의 시대, 대학박물관의 나아갈 길 김나영 삼육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16:35-16:50	[제3발표] 지자체 미술관 건립과 운영의 성공 전략 - 구리시립미술관의 정체성 모색을 중심으로 - 손정화 구리시청 학예사
16:50-17:00	휴식
17:00-17:15	[제4발표] 공공문화시설이 지역문화에 미치는 영향 - 한강문화관 사례를 중심으로 - 양은희 kwater 운영관리
17:15-17:30	[제5발표] 경력단절 여성의 지역 예술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문화기획자로의 전환 - 송파문화재단의 '아트나바다'와 '송들바람' 사례를 중심으로 - 신수하 독립기획자
17:30-17:45	[제6발표] 과세부터 탈세까지: 미술품과 박물관을 둘러싼 조세 제문제 -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을 중심으로 - 김별다비 경정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17:45-17:55	Q&A
17:55-18:00	폐회 및 기념촬영

발표문

남평주조장, 10년의 성과와 과제

윤택석
남평문화주조장 예술감독

지역 주권의 시대, 대학박물관의 나아갈 길

김나영
삼육대학교박물관 학예사

1. 서론

199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이후, 한국 사회는 중앙집권적 문화행정에서 탈피하여 지역문화 주체성의 회복을 모색해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박물관은 단순한 유물 보존기관을 넘어, 지역의 기억을 공유하고 재구성하는 공공문화 플랫폼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2014년) 제정을 계기로 박물관을 ‘지역문화 기반시설’로 명시적으로 정의되며,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거버넌스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화하였다.¹⁾ 그러나 이러한 문화분권 흐름에도 불구하고, 대학박물관은 여전히 제도적 주변부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에는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폐관 위기에 놓이기도 한다. 본 연구는 "지역 주권 시대"라는 문화분권 환경 속에서 대학박물관이 지닌 문화적·교육적 가치와 실천 가능성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대학박물관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공공역사 실천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다층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한다. 첫째, 지방분권 및 문화정책 변화는 대학박물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둘째, 대학박물관은 일반 박물관과 어떤 학술적·조직적 차별성을 지니는가? 셋째, 대학박물관이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플랫폼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자료, 한국대학박물관협회의 실태조사 및 국내 주요 대학박물관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량적 통계와 정성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특히 2000년 이후 대학박물관 운영 동향과 공공역사 실천 사례에 주목하며,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기에서 대학박물관의 위상 재정립을 모색한다.

2. 지역 주권과 박물관 정책의 변화

1) 오재환,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시민 문화 활성화의 계기」, 부산발전연구원, 2014. p.2-4.

1) 지방분권과 지역문화정책의 제도사적 전개

지방분권의 강화는 단순한 행정 권한 이양을 넘어, 문화정책의 주체와 방식 자체를 전환시켜왔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2014)과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2022)는 지역문화기반시설로서의 박물관에 새로운 위상을 부여하였다. 특히 박물관은 단순 보존기관을 넘어 문화 접근권, 정체성 강화, 지역 거버넌스의 플랫폼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분권 및 지역문화정책 제도사적 전개표>²⁾

시기	지방분권 주요 변화	지역문화정책 주요 전개	주요 법·정책 근거
1960~70년대	중앙집권적 통치 지속	문화유산 보존 중심, 실질적 진흥 부족	
1980년대	지방행정 강화 논의 시작	문화예술 진흥법 제정(1987), 문화정책 ‘지원 중심’ 변화 시작	문화예술진흥법
1991년	지방의회 부활	문화행정 지방이양 논의 시작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접선거 실시 → 완전한 지방자치제도 시작	지방문화원의 활동 활성화, 지역 정체성 강조	지방자치법
2000년대 초반	참여정부: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2004)	지역문화 컨설팅,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방분권특별법(2004)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 박물관 등 ‘지역문화기반시설’로 명시	지역문화진흥법
2022년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문체부 포함)	제3차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문화기반시설 정비 확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2), 문체부 자료

지방문화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의 문화행정 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도적 흐름 속에서 전개되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과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며, 지역 차원의 문화운영 주체가 제도적으로 등장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문화행사, 문화센터 건립, 문화원 중심의 사업들이 본격화되었고, 이러한 흐름은 이후 지역문화정책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었다.

2000년대에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기조에 따라 지역문화의 기획과 집행 권한이 확대되었다. 2004년 제정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자치

2) 본 <지방분권 및 지역문화정책 제도사적 전개표>은 김명준·김효진, 「지역문화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6권 제3호, 2024.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중앙정부가 분권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법률로서, 문화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지방의 권한 확대를 제도화하는 기반이 되었다³⁾. 또한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지역 내 문화교육 거점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했고, ‘문화도시’, ‘문화네트워크’, ‘지역문화 컨설팅’ 등의 개념이 문화정책 속에 정착되기 시작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은 지방문화정책의 법제화와 통합적 추진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이 법은 박물관, 문화원, 문화예술교육시설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지역문화 기반시설’로 명시하며, 지방정부의 정책 기획·운영 주체화를 공식화하였다⁴⁾. 특히 2022년 ‘지방시대 종합계획’⁵⁾과 2023년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⁶⁾은 문화도시와 박물관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 활력의 거점으로 설정하면서, 지역문화정책이 단순한 보존 중심에서 생활기반 중심으로 이행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제·개정과 문화 분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1991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박물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왔다. 초기 법령은 박물관의 설립과 등록 절차, 시설 기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박물관의 교육 기능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그리고 정보화와 전문 인력 확보 등 운영의 질적 기준을 점차 확대하였다. 2007년 등록제 전환은 박물관 설립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공공적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된 계기로 평가된다⁷⁾.

2016년 개정에서는 ‘사회적 역할’ 수행을 강조하면서, 박물관이 지역사회 발전과 문화향유 확대에 기여해야 할 공공문화기관임을 명문화하였다. 특히 박물관의 교육 및 체험 기능이 법적 조항에 포함되면서, 박물관은 단순한 수장고에서 벗어나 생활문화 중심의 실천 공간으로 재정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역사 실천, 지역 아카이빙,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⁸⁾.

3) 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의 발자취」, <https://theme.archives.go.kr>

4) 오재환,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시민 문화 활성화의 계기」, 부산발전연구원, 2014, pp.2-4.

5) 이 계획은 교육·산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명시하며, 문화 분야에서 지역 주도형 문화생태계 조성 및 문화시설 기반 확충을 강조하였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2.

6) 문화도시, 문화기반시설, 생활문화 활성화, 지역문화 전문인력 육성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문화정책 패러다임을 구체화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2023.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4468호(1991) 제정, 제8473호(2007) 개정,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의 발자취」, <https://theme.archives.go.kr>

8)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2조·제27조 개정 내용, 2016,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의 발자취」, <https://theme.archives.go.kr>

최근에는 디지털 기반 박물관 서비스 확대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맞물리며, 박물관이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은 ‘지역을 살리는 문화기반시설’을 주요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포용성, 접근성, 협업성 등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였다. 이는 박물관이 단순한 전시기관이 아닌, 지역주권과 문화분권의 실현 주체로서 제도적으로 재위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⁹⁾.

3) 지역문화 진흥법 이후 박물관의 역할 확장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지방정부의 문화정책 수립과 실행 권한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면서, 박물관을 지역문화 기반시설의 핵심으로 위치시켰다. 특히 제2조에서 박물관을 지역문화 생태계의 한 축으로 정의하고, 제4조와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기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책임지는 주체임을 명시하였다¹⁰⁾. 이는 박물관이 단순한 전시 기관을 넘어 지역공동체와의 연결, 문화 접근권 실현, 지역문화 정체성 강화의 중심 축이 되어야 함을 정책적으로 요구한 전환점이었다.

이 법 제정 이후 박물관은 공공역사 실천, 지역기록화, 생활문화 중심 콘텐츠 개발 등 다층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의 구술사 채록, 마을 아카이빙, 청소년 대상 지역사 교육 등은 박물관이 지역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 박물관 교육이 박물관·유물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기억’으로 확대되는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은 ‘문화 민주주의’와 ‘참여형 문화공간’이라는 지역문화정책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¹¹⁾.

또한 지역문화진흥법 이후에는 박물관이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분권 사업, 생활문화 플랫폼 구축 등의 국가적 정책과 직접 연결되며, 문화정책의 실행 거점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특히 2020년대 들어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과 지역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등 유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박물관이 단일기관 중심의 모델을 넘어, 지역문화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²⁾.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기반시설’이라는 용어를 도입하며, 박물관을 지역사회 참여형 문화 플랫폼으로 재정의하였다. 특히 시민참여형 전시, 지역 교육기관과의 협업 프로그램, 주민구술사 채록 등은 박물관의 새로운 역할로 자

9) 김명준·김효진, 「지역문화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6권 제3호, 2024, pp. 33-34.

10) 『지역문화진흥법』, 법률 제12542호, 제정 2014.5.20, 제2조, 제4조, 제6조 참조.

11) 김명준·김효진, 「지역문화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6권 제3호, 2024, pp. 38-39.

12)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2023, 참조.

리 잡고 있다. 대학박물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전통적 유물 전시에서 벗어나 지역기억과 생활문화 중심의 콘텐츠 생산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

3. 한국 박물관의 지역화 동향

1) 공립·사립 박물관의 양적 증가와 분포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박물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 박물관 수는 2000년 266개, 2010년 595개, 2024년 현재는 1,030여 개에 이르며, 이 중 공립박물관이 약 48%, 사립박물관이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¹³⁾. 수도권 중심의 집중도는 여전하나, 최근에는 충청·호남·영남 등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기반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포 확산은 지역문화 기반 확대 및 지방정부의 문화자치 기능 강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적 증가는 지역문화 수요와 정책적 지원에 따른 결과이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균형이 존재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 인력 부족, 전시 기획력 미흡, 관람객 유치 한계 등의 문제로 실질적 운영이 미비한 박물관도 적지 않다. 특히 박물관 간 협력체계 미비, 예산 자립 기반 취약 등은 지역 박물관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단순한 수적 증가를 넘어 박물관의 지역문화 기여도와 사회적 파급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질적 전환이 요구된다.

2) 지역 정체성 형성과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변화

전통적으로 박물관은 유물의 수집과 보존, 전시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해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박물관의 역할이 단순한 유물 보존을 넘어 지역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OECD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가 공동으로 발간한 지침서에서는 박물관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서는 박물관이 지역 경제와 사회 구조와의 연계성을 평가하고 강화하며,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¹⁴⁾.

13) 양현미, 「통합적인 박물관 정책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문화정책논총』, 2023. pp.251-254.

14) ICOM, OECD, 『문화와 지역발전: 영향 극대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 박물관을 위한 지침서』, ICOM Korea, 2021

오늘날 박물관은 지역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공론장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삶을 주제로 한 기획전, 노년층의 기억을 수집한 구술사 전시, 다문화 가족을 위한 문화 감수성 교육 등이 박물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¹⁵⁾ 이러한 기능 확장은 박물관이 지역사회의 ‘문화 복지 거점’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향후 박물관의 정책적 위상 변화 및 지원 체계 확대의 근거가 된다.

3) 지역 기반 박물관의 운영 특성과 과제

지역 기반 박물관은 지역의 역사, 생태, 산업, 민속 등 지역성을 반영한 전문적 콘텐츠를 통해 특화된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중앙기관 또는 대형 박물관이 제공하기 어려운 지역밀착형 해설, 생활문화 중심 프로그램, 지역민 참여형 전시 기획 등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문화 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꾀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운영 측면에서는 인력 부족, 예산 제약, 전시·교육 콘텐츠 기획 역량의 한계 등 복합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비수도권 소규모 박물관은 관람객 수 확보, 전시 순환 구조 부재, 공공기관과의 연계 미흡 등의 문제로 운영 지속 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방정부와의 협업 강화,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기획 확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전시 접근성 제고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략은 대학박물관과의 협업 가능성 논의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차후 정책적 연계 기반이 될 수 있다.

4. 대학박물관의 역사와 정체성

1) 대학박물관의 설립과 변천사

한국의 대학박물관은 시대적 흐름과 문화정책, 학술 기반에 따라 다섯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맹아기’(1928-1945)에는 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서울대 등 선도 대학들이 민속자료와 유물 중심의 박물관을 설립하며 학술연구 지원과 민족 문화 보존을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이 시기는 식민지 시기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학의 대응이 반영된 시기였다.

둘째, ‘성장기’(1955-1966)에는 국난 이후 대학들이 본격적으로 문화적 정체성

15) 김현주 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콘텐츠 발굴 및 운영 연구』, 국립한국교통대학교, 2021. pp.40-45.

회복을 위한 박물관 설립을 확대했다. 이 시기에는 국립대 및 사립대가 박물관을 통해 지역 자료를 수집하고, 교육·연구 중심 운영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성균관대, 전남대, 부산대, 충남대 등이 설립되며 전국적으로 대학박물관 체계가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셋째, ‘발전기’(1967-1982), ‘도약기’(1983-1998), ‘변화기’(1999-2021)에는 각각 박물관의 기능이 학술연구와 전시를 넘어 지역사회 교육, 문화행정 협력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변화기에는 미디어 기반 융합 콘텐츠 도입, 지역문화재단과 협력, 생활사 중심 전시 등 다원화가 본격화되었다. 2000년대 이후의 대학박물관은 공공역사, 지역 아카이빙,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1950~1970년대에는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경북대 등 주요 국공립 및 사립대학이 박물관을 설립하면서 대학 내 박물관의 설치가 일반화되었다. 특히 고고학·미술사학·민속학 등 전통 인문학 연구 기반을 갖춘 대학들이 박물관을 설립함으로써, 학문적 권위와 문화유산 보존의 이중적 목적을 함께 추구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국가주도의 문화유산 보존 정책과도 연계되어 있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대학박물관의 기능이 단순한 유물 전시에서 벗어나, 학술조사, 특별전시, 지역 연계 교육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대학박물관은 제도적 위상과 독립 예산, 전문 인력 확보 등에서 한계를 지녔으며, 운영 주체와 재정 구조의 불안정성은 대학 내 박물관의 역할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시대별 대학박물관 설립시기¹⁶⁾>

맹아기 1928-1945	성장기 1955-1966	발전기 1967-1982	도약기 1983-1998	변화기 1999-2021
연세대학교박물관 고려대학교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건국대학교박물관 경희대학교관 중앙박물관 동국대학교박물관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부산대학교박물관 경북대학교박물관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박물관 전북대학교박물관	국민대학교박물관 덕성여자대학교박물관 동덕여자대학교박물관 상명대학교박물관 세종대학교박물관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 경성대학교박물관 계명대학교 성소박물관 인하대학교박물관 전남대학교박물관 충남대학교박물관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명지대학교박물관 가톨릭관동대학교박물관 강원원주대학교박물관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충북대학교박물관 한국교통대학교박물관 목포대학교박물관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안동대학교박물관 영남대학교박물관 창원대학교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서울여자대학교박물관 동원대학교박물관 동주대학교 세피박물관 부경대학교박물관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민속자료실박물관 부산여자대학교 한국차박물관 신라대학교박물관 한국해양대학교박물관 조선대학교박물관 대전대학교박물관 배재대학교박물관 한남대학교 자연사박물관 울산대학교박물관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 수원대학교박물관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 한신대학교박물관 한림대학교박물관 한서대학교박물관 군산대학교박물관 전주대학교박물관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순천대학교박물관 전북과학대학교박물관 경주대학교박물관 대구카톨릭대학교박물관 대구한의대학교박물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영남대학교 자연사박물관 경상대학교박물관 전주교육대학교박물관	경희대학교 한의학역사박물관 삼육대학교박물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박물관 성신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 숙명여자대학교 정명양자수박물관 부산대학교 교육박물관 대구보건대학교 인당유지염 전남대학교 의학박물관 카이스트 비전관 충남대학교 자연사박물관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신구대학교 우촌박물관 용인대학교박물관 청강문화역사박물관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박물관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충원대학교박물관 한국고원대학교 교육박물관 백석대학교 기독교박물관 선문대학교박물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 경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 대구보건대학교 보현박물관 인제대학교박물관

16) 라지인, 이민, <대학박물관의 지역 연계 프로그램 특성 연구>, 문화와 융합, 2023.참조

2) 대학박물관의 이중적 사명: 교육·연구 vs 지역 봉사

대학박물관은 대학이라는 교육·연구기관의 부속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는 학문적 지원과 교육적 기여를 우선하는 정체성을 가진다. 즉, 고고학, 미술사학, 민속학, 자연사학 등 특정 전공 학과와의 연계 속에서 조사연구, 유물 보존, 전시를 수행하며, 학과 수업의 실습 공간 또는 학술 성과물의 시각화 공간으로 기능해왔다. 이는 일반 박물관과 구분되는 대학박물관의 근본적 정체성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학박물관의 ‘지역 공공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 또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속에서 대학박물관이 교육자원과 콘텐츠를 보유한 기관으로 주목받으면서, 지역 주민 대상 전시, 시민참여 프로그램, 지역 아카이브 사업 등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대학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이중적 사명은 때로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대학 내에서는 순수 학문 중심의 기능을 강조하며 외연 확대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지역사회는 박물관을 시민 대상의 개방형 공간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긴장을 조율하며 두 기능을 통합하는 운영 전략이 향후 대학박물관의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¹⁷⁾.

3) 국내 주요 대학박물관의 설립 유형 및 발전사

국내 대학박물관은 설립 배경과 운영 방식에 따라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인문학 기반의 고전자료 및 유물 중심 박물관(예: 고려대, 서울대, 경북대)은 전통 유물과 고문서, 고고 유물을 중심으로 수집하고 교육·연구 중심으로 운영된다. 둘째, 지역문화 기반 박물관(예: 전남대, 제주대)은 지역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지역생활사, 향토자료 중심의 수집과 전시를 강화해왔다. 셋째, 융합형 콘텐츠 중심 박물관(예: 성균관대, 국민대)은 미디어아트, 디자인, 테크놀로지 등 새로운 콘텐츠와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¹⁸⁾

발전 과정에서도 각 박물관은 대학의 정체성과 지역적 환경에 따라 다른 궤적을 보였다. 일부 박물관은 국립기관 수준의 유물 보유와 전시 능력을 갖춘 반면, 다른 일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활동에 특화되거나 소규모 테마형 박물관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대학박물관이 단일한 모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부의 대학평가 기준에서 박물관 항목이 제외되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박물관 운영을 축소하거나 폐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17) 정재영, 「대학박물관의 사회적 역할과 문화거버넌스 실천 방안」, 『박물관학보』 제35호, 2021, pp. 22-24.

18)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kaum.or.kr/>

대학박물관의 제도적 위상 재정립과 독립적 운영기반 확보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각 대학이 박물관의 전략적 기능과 미래적 가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다.

5. 대학박물관 운영 실태와 동향 분석

1) 대학박물관 수, 전문인력, 운영 구조의 변화

2000년 이후 전국 대학박물관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나, 전체 박물관 대비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기준 약 80여 개에 달하던 대학박물관은 2010년 98개, 2024년 현재 약 106개로 파악된다¹⁹⁾. 반면, 동일 기간 전체 박물관 수는 266개에서 1,000여 개 이상으로 급증하며, 대학박물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 내부의 구조조정, 평가체계의 변화, 예산 재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 인력 운영 측면에서도 뚜렷한 한계가 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학박물관의 상근 학예연구사는 평균 1.8명 수준으로, 이는 공립박물관 평균(3.4명)에 비해 현저히 낮다²⁰⁾. 또한 대학박물관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학예사를 채용하거나 학내 직원이 겸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박물관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2) 전시·교육·조사연구 활동 비교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박물관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이다. 2000년대 초반 대학박물관은 연평균 1~2건의 기획전시와 학술 세미나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2010년대 중반부터는 지역 연계형 전시, 교과 연계 수업,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었다²¹⁾. 예를 들어, 국민대학교박물관은 2015년 이후 매년 지역 아동 대상 문화유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북대학교박물관은 지역 고고학 발굴성과를 기반으로 한 전시와 연계 학술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대 이후 디지털 기반 전시 콘텐츠와 온라인 교육자료 개발이 확대되었으며, 일부 대학박물관은 메타버스 기반 전시관도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체 대학박물관 중 이러한 운영을 실현하고 있는 기관은 20% 미만으로,

19) 한국박물관협회 및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홈페이지 회원관 등록현황 참조.

20)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참조. <https://www.culture.go.kr/local/>

21) 한국박물관협회 및 대학박물관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

여전히 전통적 전시와 교육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²²⁾. 이는 대학의 예산 및 조직 구조 한계, 학내 관심 부족 등의 구조적 제약을 반영한다.

3) 운영 지표 정체와 국가 지원 사업의 중요성

대학박물관의 운영 성과는 지난 10여 년간 주요 지표상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물관 수, 전시 횟수, 교육 프로그램 수, 관람객 수 등 운영 실적 지표들은 대부분 정량적으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 항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체는 대학 내부의 박물관에 대한 우선순위 하락, 전담 인력 부족, 평가 지표 미반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²³⁾. 특히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박물관 항목이 제외되면서 박물관 운영은 대학 행정의 주요 관심사에서 밀려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²⁴⁾.

이에 따라 국가 지원 사업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대학박물관 특별전시 지원 사업’ 등은 일부 대학박물관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진흥원 및 한국대학박물관협회를 통한 연구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들은 공모형 단기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안정적인 운영 기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대학박물관에 특화된 장기적 지원 정책과 평가제도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²⁵⁾.

6. 일반 박물관과 대비되는 대학박물관의 특수성

● 설립 주체와 학술 기반 차이

일반 박물관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설립하는 반면, 대학박물관은 고등교육기관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부속기관이다. 이로 인해 대학박물관은 학문적 신뢰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유물 수집과 해석, 전시를 수행하며, 교육과 학술연구에 밀접하게 연계된다는 특수성이 있다. 특히 고고학·미술사학·민속학 등 특정 학문과 직결되는 박물관은 전공 커리큘럼과 직접 연결되어 ‘살아 있는 실험실’로 기능한다.

22) 안혜진, 이소민, 「문화마케팅 관점에서 본 대학박물관의 활성화 방안」, 『예술경영연구』 71호, 2024. .pp.

23)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참조, <https://www.culture.go.kr/local/>

24) 『박물관뉴스』, “대학박물관이 사라지고 있다”, 2023. <https://museumnews.kr/287connection01>

25) 김명준·김효진, 「지역문화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6권 제3호, 2024, pp. 41-42.

또한 대학박물관은 고유의 학술자산과 교수진, 학생 자원을 활용해 전시 기획, 학술 출판, 세미나 등을 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지식 생산과 문화 확산의 복합 거점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는 전시·교육 기능 중심의 일반 박물관과 구별되는 학제적, 실천적 융합 가능성을 시사한다.

- 전문성, 자원, 교육 가능성의 강점

대학박물관은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잠재력이 크다. 예를 들어, 대학 소속 교수의 자문, 대학원생의 교육 실습, 학과 간 협업 프로젝트 등은 박물관 운영에 학문적 깊이를 더하고,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일부 대학박물관은 이를 활용해 융합 전시, 인터랙티브 콘텐츠, 지역 아카이빙 등 실험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²⁶⁾.

또한 일반 박물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대학박물관이 지역사회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며 ‘개방형 대학’의 실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는 공공성과 전문성이 결합된 독특한 문화거점 모델로 주목할 수 있으며, 향후 지역문화 거버넌스와 연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²⁷⁾.

- 재정 기반, 접근성, 홍보력의 약점

한편, 대학박물관은 학내 부속기관이라는 위치로 인해 독립 재정 확보가 어렵고, 대외 사업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학교 본부의 예산 편성 기준과 관할 부서에 따라 박물관 운영 인력 충원, 시설 개선, 전시 기획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자율성과 장기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비수도권 중소규모 대학박물관의 경우,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더욱 심화된다.

또한 접근성과 홍보 측면에서도 일반 박물관에 비해 상대적 약점을 가진다. 대학 캠퍼스 내부에 위치한 경우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일반 시민의 관람 접근성이 낮으며, 대중 홍보 채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인지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 대학박물관의 지역 연계 가능성과 공공역사 실천

26) 대학박물관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대학박물관활동 프로그램들을 참조하였다.

27) 김미라, 「지역문화 플랫폼으로서의 대학박물관 가능성 연구」, 『박물관학보』 제35호, 2021, pp. 66-69.

- 공공역사 개념과 대학박물관의 실천 가능성

공공역사(public history)는 학문적 역사 서술이 아니라, 시민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역사 실천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박물관은 이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공간 중 하나다. 대학박물관은 전문 인력과 학술 자료, 교육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기억과 경험을 수집·기록·전시하는 데 강점을 가지며, 이는 공공역사의 실천 거점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²⁸⁾. 특히 구술사 채록, 마을 아카이빙, 공동 전시기획 등은 지역민의 삶을 역사화하는 실천적 활동으로서 대학박물관의 역할을 재정의한다.

최근 일부 대학박물관은 지역문화재단, 지자체 등과 협업해 공공역사 기반 전시와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유물 중심 운영에서 벗어난 의미 있는 변화다. 특히 ‘기록자-시민’ 모델은 대학의 학술성과 지역 공동체의 기억을 연결하는 구조로, 대학박물관이 가진 연구역량과 지역사회 문화주체성을 매개하는 중간지대로 주목된다.

-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업 사례 분석

대학박물관의 공공역사 실천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예를 들어, 삼육대학교박물관은 ‘노원 기억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주민의 구술사와 사진 기록을 수집·전시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모델로 평가받는다. 이화여대박물관은 ‘장소기반 전시’를 통해 지역의 기억과 장소성을 시각적으로 연결하고, 전시를 주민 참여형으로 기획하며,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문화치유형 기획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대학박물관이 단지 교육 보조기관을 넘어 지역문화 주체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협업은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도시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실천적 현장으로서 대학박물관의 위상을 강화한다. 나아가 대학박물관은 ‘기억의 장소’로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재구성하는 문화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²⁹⁾.

28) 1970년대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등장했으며, 특히 박물관은 공공역사의 대표적인 실천 공간으로 자리잡아 왔다. 시민과 공동체는 단순한 관람객을 넘어, 기록자, 큐레이터, 해설자로 참여하며 역사 서술의 주체가 된다. 대학박물관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연구 기반과 시민 참여를 연계하는 공공역사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는 역사적 지식의 민주화와 지역 정체성 강화에 기여한다. 이동기, 「공공역사 관점의 현대사박물관 이해」, 『인문학연구』, 2024, pp. 10-13.

29) 김규원, 김소연, 변지혜, 『대학과 지역문화 연계 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

8. 정책적 제언과 미래 방향

대학박물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다. 첫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대학박물관의 법적 정의 및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하며,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대학박물관 대상 지원사업을 연차별로 기획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등록제에 머무르지 않고 ‘운영역량 인증제’ 등을 도입하여 질적 운영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본부의 인식 개선과 구조개혁도 병행되어야 한다. 대학박물관을 단순한 부속기관이 아니라 융합연구와 교양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재배치해야 하며, 박물관 관련 교과과정 확대, 박물관 운영위원회 제도화, 문화행정학과와의 협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 내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전국 단위의 ‘대학박물관 협의체’ 설립을 통해 공동연구, 학술대회, 공동 기획전을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지역문화재단, 시립박물관, 생활문화센터 등과의 ‘지역문화 동맹’ 모델을 통해 상호 협력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AI 기반 디지털 아카이빙, 메타버스 전시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기술 융합형 박물관 모델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9. 결론

본 연구는 지역 주권 시대의 문화분권 흐름 속에서 대학박물관의 존재의의와 전략적 가능성을 재해석하였다. 박물관 정책의 법제화, 지역문화 기반시설로서의 재정의, 공공역사 실천의 확대는 모두 대학박물관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학박물관은 교육·연구 기능과 지역사회 봉사라는 이중적 사명을 지니며, 이를 통해 학술성과와 사회적 연계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복합 문화기관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예산과 인력 부족, 제도적 무관심, 홍보력 미비 등 구조적 제약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학박물관에 특화된 법적 정의와 역할 명시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포함되어야 하며,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장기적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대학 내에서도 박물관을 교육자산이자 지역문화 거점으로 재인식하고, 행정적 구조개편이 동반되어야 한다.

향후 연구는 대학박물관 이용자 분석, 지역 간 협력모델 비교, 디지털 전환 전략의 효과성 평가로 확장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대학박물관이 단순한 유물 보

관소를 넘어서, 지역주권 실현의 핵심 기반이자 살아있는 문화기록자로 거듭나야 함을 제안하며, 새로운 문화거버넌스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참고문헌

- ICOM, OECD, 『문화와 지역발전: 영향 극대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 박물관을 위한 지침서』, ICOM Korea, 2021. <https://icom.museum>
- 김규원, 김소연, 변지혜, 『대학과 지역문화 연계 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
- 김동전, 「대학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 『문화사학』 30, 한국문화사학회, 2008, pp.31~52.
- 김명준·김효진, 「지역문화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6권 제3호, 2024.
- 김현주 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콘텐츠 발굴 및 운영 연구』, 국립한국교통대학교, 2021.
- 마르틴 뢰케, 이름가르트 천도르프, 정용숙(역), 『공공역사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20.
- 안혜진, 이소민, 「문화마케팅 관점에서 본 대학박물관의 활성화 방안」, 『예술경영연구』 71호, 2024.
- 양시은, 「대학구성원으로서 박물관의 역할과 과제」, 『고문화』, 2014.
- 양현미, 「통합적인 박물관 정책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문화정책논총』, 2023.
- 오재환,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시민 문화 활성화의 계기」, 부산발전연구원, 2014.
- 이경희, 권성영, 「대학박물관 체험프로그램 기록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22.
- 이동기, 「공공역사 관점의 현대사박물관 이해」, 『인문학연구』, 2024.
- 이화종, 「문화적 플랫폼으로서의 대학박물관의 역할」, 『고문화』 94, 2019.
- 황윤, 『박물관 보는 법』, 유유, 2015.
- 국가기록원, <https://theme.archives.go.kr>
-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2016.
-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 2024.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2023.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4468호(1991) 제정, 제8473호(2007) 개정.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https://www.culture.go.kr/local/>
- 한국대학박물관협회, <http://www.kaum.or.kr/>
- 한국박물관협회, <https://museum.or.kr/2014>

구리시립미술관의 정체성과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 지역문화자산과 생애주기 감수성의 융합을 중심으로 －

손정화
구리시청 학예사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지방 중소도시의 공립미술관은 이제 단순한 전시기관을 넘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공동체 회복을 실현하는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 수도권 동북부의 관문 도시인 구리시는 인구 대비 문화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한 현실 속에서, 미술관 설립을 통해 도시의 문화 역량을 확장하고자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구리시립미술관이 지역성과 생애주기 기반 전략을 통해 차별화된 공공미술관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관련 법령 및 문체부 사전평가 기준 분석, 구리시의 역사·지리·문화 자산 분석
국내외 공공미술관 사례 비교 (성북구립, 인천시립, 부산시립, 대구미술관 등)
학술포럼 참가를 통한 현장 동향 수집 및 전문가 네트워크 분석
구리시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독자적 문화성과 시간성을 축적해 온 도시임.

동구릉, 망우공원, 아치울 예술인촌, 아천동 은행나무 등이 구리만의 문화적 DNA를 형성함.

구리시립미술관은 이 지역성과 자산을 바탕으로 전통과 미래를 연결하는 하이브리드형 공공미술관.

2. 구리시의 지역성 및 미술관 설립 필요성

1. 왜 구리인가 - 지역문화의 가능성

구리시는 서울 동북부와 맞닿은 중소도시로, 동구릉이라는 조선왕릉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비롯해 9개의 행정동,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아치울이라는 예술가 거주지 등을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아치울에는 생전 김점선(1946-2009), 하인두(1930-1989) 화백을 비롯해 구본창(1953~), 이두식(1955~) 등의 예술가들이 작업실을 꾸리고 활동했음.

특히 김점선 작가는 박완서 작가(1931~2011)와 오랜 교류를 이어온 인물로, 문학과 미술이 교차하는 구리만의 인문 예술 자산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산을 단순히 아카이브로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의 감수성과 연결된 공간으로 확장하고자 함.

2. 생애 감수성 기반 '인생미술관' 모델 제시

구리시립미술관은 전 생애 주기를 포괄하는 정체성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9개의 생애 조각'이라는 콘셉트를 도입해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등 삶의 흐름을 시각화하고, 이와 연결된 전시, 교육, 힐링 프로그램을 기획 중.

갈매동 산마루공원 내 본관과 토평지구 내 청년작가 인큐베이팅 레지던시 9개소를 연결하여, 시민 누구나 자신의 인생 조각을 탐색하고 회복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만들고자 gka.

2-1. 구리시의 지역문화 특성과 자산

9개의 행정동과 '동구릉(東九陵)'의 '구(九)'를 테마로 한 철학적 의미 기반 '아치울'을 중심으로 활동한 하인두, 김점선 등 예술가의 생애사와 작품 망우리 공원 내 안치된 권진규, 이인성 등의 예술정신과 추모 문화 유산 '힐링', '생애', '문학예술'의 융합이 가능한 정서적 도시환경

2-2. 구리시 미술관의 차별성 필요

수도권 내 공공미술관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체성 요구
단순 디지털화가 아닌 '디지털+감성+지역성'의 결합 필요

3. 구리시립미술관 정체성 형성 전략

3-1. '인생미술관(Life Museum)' 모델 제안

생애주기 기반 콘텐츠 구성 (유년기~노년기까지 관람자 중심의 기획)
'9'개의 인생 조각 주제 전시 및 공원 조각물 설치를 통한 경험 확장
토평지구 청년작가 인큐베이팅 레지던시 9개소 조성
김점선·하인두·권진규·이인성 등 지역 기반 작가의 생애연계 전시기획

3-2.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

미술관 설립 이후의 안정적 운영계획 수립 (조례 제정, 수집계획 포함)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한 유족 협의 및 MOU 체결 기반 조성
중장기 기획전 및 시민참여형 교육 콘텐츠 구축

3-3 지역성과 문화자산 분석

1. 동구릉과 '9' 철학

동구릉은 아홉 기의 왕릉이 집약된 세계문화유산임.

'9'는 완성·확장·영속성을 상징하며, 구리(九里)라는 지명에도 이 철학이 내재함.

'9가지 이야기(9 Story)'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성과 철학적 스토리텔링 강화 가능함.

2. 망우공원과 생애예술

망우공원은 권진규, 이인성 등 근현대 예술가들이 안장된 공간임.

삶과 예술의 연결을 주제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구성 가능함.

생과 사, 예술혼 지속을 주제로 특화 전시 기획 가능함.

3. 아치울 예술인촌과 창조 유산

하인두, 김점선, 이두식, 구본창 등이 활동했던 예술인촌임.
하인두·김점선 유족과 MOU 체결 통한 작품 기증 추진 중임.
아치울 창조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할 레지던시 및 전시 기획 필요함.

4. 문학과 미술의 연결성

김점선의 문학적 감수성과 시각예술 융합은 지역문화 자산임.
지역 문인·예술인을 연결하는 복합 프로그램(전시+워크숍) 기획 가능함.

5. 아천동 은행나무와 시간성

아천동 297번지 소재 은행나무는 수령 약 931년, 보호수 제1호임.
우미내마을의 수호목으로 기억·생명력·공동체성의 상징임.
미술관 공간 및 프로그램 설계 시 스토리텔링 자원으로 활용 가능함.

Ⅲ. 구리시립미술관 정체성 비전

1.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미술관

왕릉문화·생애예술·현대미술 유산을 연결하는 복합형 공간 지향함.

2. '9가지 이야기' 전략

9개의 테마(생명, 기억, 예술혼, 창조성 등)를 설정하여 스토리 강화함.

3. 디지털 미래지향 미술관

디지털 기반 미디어아트·인터랙티브 콘텐츠 확장 추진함.

디지털 아카이빙 및 미래형 예술 플랫폼 구축 계획함.

4. 청년 예술가 인큐베이팅

9개 레지던시 운영, 청년작가 육성, 디지털 창작 지원 추진함.(구리시는 타당성 통과후, 갈매동 본관.

토평2지구 개발중인 구리 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LH와 부지 관련 협력을 얻어 본관을 마련할 부분 검토

5. 글로벌 연결성 강화

국내외 레지던시 교류, 국제 미디어아트 기관과 협력 강화 추진함.

IV. 해외 벤치마킹 적용사례

기관명	국가	주요 특성	구리시 적용 포인트
Ars Electronica Futurelab	오스트리아	예술·기술·사회 융합 실험	디지털 아트 실험, AI/미래형 콘텐츠
ZKM	독일	예술·기술 경계 해체	전통+디지털 복합형 미술관 운영 모델
Mori Art Museum	일본	도시문화+국제 현대미술	도심 문화공간화, 지역-세계 연결 전략
Pompidou Media Lab	프랑스	디지털 아카이빙·미디어 연구	디지털 기반 아카이브 및 관람자 경험 혁신
ACMI	호주	미디어아트+게임+VR 체험	체험형 디지털 콘텐츠 강화, 젊은층 유입

1. Ars Electronica Futurelab (오스트리아)

특징: 예술·기술·사회 융합 실험 플랫폼

활용 가능 포인트:

디지털 미디어아트 강화 전략에 최적합

AI, VR, 인터랙티브 기반 전시 및 연구개발 중심 모델

시민참여형 실험 프로젝트 운영 가능 (Future Innovators Summit 등)

2. ZKM (독일)

특징: 예술-기술-사회 통합형 복합문화기관

활용 가능 포인트:

전통미술+뉴미디어아트 결합형 운영모델, 예술과 기술 경계를 해체하는 복합미술관 모델 제시함.

디지털+전통 복합 운영 방식 구리시립미술관에 적용 가능함.

디지털 아카이빙 및 미디어아트 연구 허브

"예술과 기술 경계 해체"라는 미션은 구리시립미술관 디지털 전략과 일치

3. Mori Art Museum (모리미술관, 일본)

특징: 도시문화와 현대미술 연계, 글로벌 네트워크형 미술관

활용 가능 포인트:

고층 도심 속 문화공간 모델 (구리 도심 연계 가능)

국제전, 글로벌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지역성과 국제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시 기획 방식 (구리시의 지역-세계 연결 전략에 부합)

4. Pompidou Media Lab (퐁피두 미디어랩, 프랑스)

특징: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실험적 미디어 콘텐츠 연구

활용 가능 포인트:

구리시립미술관 디지털 플랫폼 구축 참고 가능

미디어 실험, 관람객 참여형 콘텐츠 개발 모델

전통 현대미술관의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

5. ACMI (Australian Centre for the Moving image 호주)

특징: 영상·미디어아트 전문 인터랙티브 미술관

활용 가능 포인트:

미디어 기반 시민 체험형 콘텐츠 강화

게임, VR, 인터랙티브 영화 등 새로운 문화 콘텐츠 융합

젊은 세대와 디지털 세대 유입 전략에 최적화

V. 결론

구리시립미술관은 지역성과 세계성을 통합하는 새로운 공공미술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전통과 미래,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복합문화 거점으로 성장할 것임.

'9' 철학, 생애예술, 아천동 은행나무, 아치울 창조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
여, 구리시
고유의 문화적 유기체가 도는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함.

“구리미술관 이야기, 9가지 인생미술관”
-구리시립미술관의 정체성과 전략-

1. 개요

- 발표자: 손정화(구리시 문화예술과)2025-05-11
- 목적: 문체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대응 및 시민공감 확보
- 형식: 텍스트 개요 / 시각자료 동반

2. 서론: 왜 지금, 왜 구리인가?

- 수도권 동북부 문화시설 공백 지대
- 동구릉, 아천동 은행나무, 구석기 유적 등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
- 도시브랜드와 문화자산 간의 연결성 부재 → 미술관 필요성 부각
- [시각자료1: 수도권 문화시설 분포 지도 + 구리시 문화공백 영역 강조]
- 미술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다. 도시의 삶을 품고 시민의 이야기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감성기반 문화거점

3. 정체성 제안: "구리 9 스토리" 미술관

3-1. 개념

- 동구릉 9릉에서 착안: 생로병사와 인간 삶의 순환을 주제로 한 조각 공원 구상
- 각 단계별 감정과 주제를 표현하는 디지털/입체 전시 기획
- [시각자료2: ‘생애 9단계’ 조형물 예시 도식화 - 유년/청춘/사랑/도전/병/죽음/애도/회복/희망 등 키워드 중심 이미지]

3-2. 전 세대 공감형 콘텐츠

-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체험형 콘텐츠 설계
 - 명상, 치유, 회복을 중심 테마로 한 관람 동선 설계
 - [시각자료3: 연령별 체험 콘텐츠 구성도 + 시니어 휴식/명상존 이미지]
-

4. 공간 전략: 산마루공원 중심 본관 구상

4-1. 건축 계획

- 부지: 갈매동 산마루공원 내 33,000m²
- 구성: 실내 전시관 + 야외 조각공원 + 레지던시(9실)
- [시각자료4: 조감도 + 레지던시 평면도 및 동선 흐름도]

4-2. 핵심 콘텐츠

- 김점선 기증관: 문학+회화의 융합형 공간
- AI·인터랙티브 아트 체험관 / 지역예술 아카이브관
- 라이브 스튜디오 운영: 시민 참여형 창작 전시
- [시각자료5: 김점선 작품 이미지, AI전시 예시, 아카이브 존 시각구성]

5. 운영 전략 및 차별화 포인트

5-1. 3대 차별화 전략

1. 서사형 미술관: 시민의 인생을 주제로 구성
 2. 디지털 감성 치유관: 감정 기반 몰입 전시
 3. 자연-예술 연계형 산책미술관: 산마루공원 자연과 조화
- [시각자료6: '감성+휴식+기술' 접목된 콘텐츠 구조도]

5-2. 거버넌스 및 협력

- 김점선기념연구회, 하인두 유족 MOU 체결
- 구리도시공사 및 지역 개발사와 협력 개발 방안 검토 중
- [시각자료7: MOU 장면 및 공동 협력 파트너 로고 배치]

6. 기대 효과 및 결론

- 지역 정체성 강화 및 시민 자긍심 회복
 - 구리형 예술 생태계 조성: 예술인 창작 → 전시 → 교류 선순환
 - 수도권 동북부 문화공백 해소
 - [시각자료8: 구리시민 설문조사 결과 요약 인포그래픽 + 기대 효과 흐름도]
-

공공문화시설이 지역문화에 미치는 영향

- 한강문화관 사례를 중심으로 -

양은희
kwater 운영관리

K water 운영관리
금강문화관

한강문화관이 지역문화에 미치는 영향



2018.5.8. ~ 2020.10.18.



목차



1. 한강문화관 개요

- 설립 배경 및 목적
- 운영 주체
-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2. 주요 활동

- 문화·환경컨텐츠 프로그램
- 지역상생 서비스
- 정부지원사업 참여

3. 강문화관의 특징

- 하천 중심의 장소성
- 지역 커뮤니티와의 밀착성
- 다기능 복합공간

4. 주요 기능

- 교육 기능
- 문화 기능
- 생태 및 관광·여가 기능

5. 프로그램 및 행사

- 전시 및 공연
- 교육 프로그램
- 축제 및 특별 행사

6. 지역사회 영향 및 전망

- 지역문화 활성화 기여도
- 사회적 영향
- 향후 발전 방향

한강문화관 개요

한강문화관은 2011년 설립되어 2012년부터 업무를 시작한 복합문화공간입니다. 환경부와 K-water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강(江)을 중심으로 형성된 수변 지역의 문화적, 생태적, 교육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환경부·K-water 운영 복합문화공간

이 공간은 단순한 전시관을 넘어 지역의 자연 생태 교육, 수자원 이해, 문화 콘텐츠 체험을 아우르는 시설로, 강과 물의 문화를 친환경적으로 결합한 친수복합문화 공간을 지향합니다.



강문화관의 주요 활동



창의적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문화·환경 프로그램 기획
- 지역 특성 반영 콘텐츠
-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 예술과 환경의 융합
- 창의적 접근 방식 도입

지역상생 문화서비스

- 지역 주민 참여 전시
- 지역 예술가 협업
- 커뮤니티 공간 제공
- 지역 문화 행사 지원
- 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정부지원사업 참여

- 문화예술 지원사업 유치
- 정부 주도 프로젝트 수행
- 지역 문화 발전 기여
- 공공기관 협력 강화
- 문화 정책 실현의 장

문화향유 기반 조성

- 보편적 문화향유권 확대
- 포용적 환경문화서비스
-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 접근성 높은 프로그램
- 다양한 계층 참여 유도

강문화관의 특징



하천 중심의 장소성

- 강을 배경으로 한 자연 친화적 공간
- 수변 생태계와 연계된 프로그램
- 강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콘텐츠
- 물 순환 및 수자원 관리 교육의 장
- 강변 경관을 활용한 문화 활동



지역 커뮤니티와의 밀착성

-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지역 예술가와의 협업 전시 및 공연
- 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 특산물 장터 등 커뮤니티 행사
- 지역 학교 및 단체와의 연계 활동



다기능 복합공간

- 전시, 공연, 교육이 가능한 통합 공간
- 생태 체험과 환경 교육의 장
- 문화예술 향유 및 창작 활동 지원
- 휴식과 여가를 위한 공공 시설
- 지역 관광 자원으로서의 역할

강문화관의 주요 기능



교육 기능

- 물의 순환 교육
- 수자원 관리 이해
- 생태계 교육 제공
- 환경 의식 고취
-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



문화 기능

- 강 관련 전통문화 소개
- 다양한 예술 전시 개최
- 체험 활동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예술가 협업 기회
- 문화 다양성 증진



생태 기능

- 주변 생태계 보전 활동
- 강변 생태 탐방 프로그램
- 생물다양성 교육
- 환경 모니터링 활동
- 생태 복원 프로젝트



관광·여가 기능

- 방문객을 위한 쉼터 제공
- 강변 산책로 조성
- 다양한 전시 공간 운영
- 레저 활동 지원
- 지역 관광 활성화

기획전시 (1): 지역예술가 협업



시민 주축 전시 현황

- 단체전: 총 32회 개최 45,030명
- 개인전: 총 40회 진행 31,000명



여주미술교과연구회 전시

- '제 32회 미래전' 성공적 개최
- 지역 예술 교육의 중요성 강조

기획전시 (2): 전문작가 초청



전업예술가 작품 전시

- 개인전: 49회 성공적 개최
- 단체전: 2회 다양한 작품 선보임



지역시민 대상 동호회 작품전시

- 지역 전통 민화 작품 전시
- 문화유산 계승 및 현대적 재해석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여주세종합창단 공연

- 지역 대표 합창단 정기 공연
- 클래식부터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레퍼토리
- 지역 주민 문화 향유 기회 제공
- 음악을 통한 공동체 의식 강화
- 지역 예술 인재 발굴 및 육성



거리 예술 공연

- '거리로 나온 예술' 프로젝트 운영
- 다양한 장르의 거리 공연 진행
-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문화 교류
- 공공 공간의 문화적 활용도 증대
- 신진 아티스트 발굴 플랫폼 역할



특별 공연 이벤트

- 남한강 돛자리 콘서트 개최
- 청소년 진로 토크콘서트 운영
-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 체험 제공
- 세대 간 소통의 장 마련
-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 콘텐츠 개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ECO 공발전소 진로교육

- 청소년 대상 환경 진로 탐색
- 생태 전문가 멘토링 제공
- 실습 위주의 체험 학습
- 지속가능한 미래 직업 소개
- 환경 의식 고취 교육



캘리그래피 교실

- 한글 예술 글씨 기법 학습
- 강 문화와 연계한 작품 제작
-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
- 지역 문화 정체성 강화



친환경 과학교실

- 생태계와 과학의 연계 학습
- 실험 중심의 체험 활동
- STEAM 교육 방식 도입
- 환경 문제 해결 능력 배양
- 과학적 사고력 증진



친환경 디자인교실

-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창작
- 업사이클링 기법 교육
- 생태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 지속가능한 디자인 개념 학습
-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개발

축제 및 특별 행사

한마당 축제	봉산탈춤 공연	두레나루촌 행사	명절 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며 배우는 한마당 축제 개최 - 2018년 2,420명 참여 -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 지역 주민 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무형문화재 협조로 진행 - 전통문화 계승 및 홍보 - 관람객에게 문화적 경험 제공 - 지역 문화 정체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포보(금사면) 지역 특산물 장터 - 지역 공연 및 문화 행사 개최 -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주민과 방문객 교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절 맞이 특별 프로그램 운영 - 전통문화 체험 기회 제공 - 가족 단위 방문객 유치 -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
			



정부지원사업 참여

강문화관은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문화관의 정부지원사업 활용 및 성과

- 2018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 참여
- '영상블 셋(set) 가야금과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 프로그램 운영
- 여주시 세종문화재단 공모사업 참여 (2019년 220명 참가)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스타일장(style場)으로서의 강문화관

- 특정 생활양식과 문화적 감수성 형성 공간
- 환경 보호, 공동체 의식, 생태주의 등 새로운 사회적 가치 실현
- 지역 특산물 장터 및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활동 전개
- 지역 주민의 문화적 정체성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역 커뮤니티 협력

강문화관은 지역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문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은 강문화관의 핵심 운영 전략입니다.



강문화관의 지역사회 연계 활동 및 성과

- 여주대학교와 업무협약(MOU) 체결
- 여주시 평생교육 중장기 5개년 중합발전계획 참여
- 지역 동호회 활동 적극 지원 (예: 캘리그라피, 민화협회)
- 지역 예술가 및 문화단체와 협업 전시 및 공연 진행



AR 체험프로그램

강문화관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혁신적인 AR(증강현실)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R(증강현실) 체험프로그램

구분	AR 내용
한강문화관 홍보	▶ 남한강에서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백두, 고기리물 등 한강문화관 설명 및 홍보
남한강 물, 생태계 설명	▶ 남한강에 마다나는 스키지 물기 등 약관을 통해 알아보는 물과 생태계를 소개하는 자료
남한강 환경 체험	▶ 교구에 있는 활동용이 들어갈 후, 내거 구멍 활동 용에 부 남한강을 가장한에 색칠하는 자료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체험교육 혁신

- 남한강 청미천의 생태환경 교육 영상 제작
- YouTube 채널을 통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제공
- AR 기술을 활용한 interactive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 502회 이상의 조회수 기록, 높은 접근성 확보



사회적 영향

강문화관은 사회공간의 상동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민주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문화 활성화와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문화관의 지역사회 기여 및 문화 민주화

-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지역 예술가 및 주민 참여 기회 확대
-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으로 문화 격차 해소
- 지역 정체성 강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 기여



결론 및 향후 전망

강문화관은 지역 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환경, 문화, 교육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강문화관의 지역문화 기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문화 접근성 향상
- 지역 커뮤니티 강화: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공동체 의식 증진
- 환경 인식 제고: 강 생태계 교육을 통한 환경 보호 의식 고취
- 향후 과제: 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경력단절 여성의 지역 예술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문화기획자로의 전환

- 송파문화재단의 아트나바다와 송들바람 사례를 중심으로 -

신수하
독립기획자

1. 서론

오늘날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적 복귀는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이다. 노동시장 진입에 평균 8.9년이 소요되는 현실³⁰⁾에서 문화예술 분야 지역기반 문화기획자는 육아를 통한 경험이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축적된 삶의 이해로 동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문화 공간, 놀이시설 위치 등 생활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특정 연령대 자녀를 둔 부모의 정보 공유 방식이나 프로그램 참여 선호 시간대, 문화 행사 참가 시 이동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그러하다. 이같이 육아로 자연스럽게 체득한 경험은 문화기획자가 공공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프로그램으로 기획·설계하는데 결정적 작용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문화재단의 'N개의 서울' 사업 일환으로 송파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한 두 프로젝트 '아트나바다'와 '송들바람'을 중심으로 지역 예술 네트워크에 참여한 경력단절 여성이 문화기획자로 전환한 사례를 분석한다. 연구자는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단순한 행사 운영자가 아닌 지역사회와 예술을 연결하고 조율하는 기획자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경력단절의 시간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축적하는 기회로 전환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출산과 육아를 통해 형성된 삶의 경험은 문화기획 현장에서 사회적 자산으로 작용할 수

30) 여성가족부,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여성가족부, 2023)
2022년 기준 만 25~54세 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42.6%에 이르며, 재취업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8.9년으로 나타났다. 2023년 6월 1일.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1150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 사회의 문화 발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역 주민의 니즈를 파악한 콘텐츠 구상하는 과정은, 사회의 공공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경력단절이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구조적 요인에 기인³¹⁾하며 경력 복귀의 입구 또한 협소한 상황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지역기반 문화기획은 경력단절 여성에게 새로운 진입 지점을 제공하는 대안적 영역으로 주목 된다.

2. 본론

‘아트나바다’와 ‘송들바람’ 프로젝트는 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한 ‘N개의 서울’ 지역문화·생활예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단순한 행사후원이 아닌 지역 고유의 문화 다양성과 주민 주체성을 바탕으로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역문화재단이나 주민 커뮤니티가 직접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생활 속 문화 활동의 일상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일회성 문화 사업과 구별된다. 송파문화재단 역시 지역 문화자산과 지자체 주민의 문화적 욕구, 그리고 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술인 네트워크를 구상했다. 그리고 예술인 모집 공고에 나이제한을 두지 않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네트워킹참여를 유도했다.

송파 예술단지 프로젝트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획되었다. 2022년을 기점으로 지역 기반 활동을 이어오던 청년 예술인들은 네트워킹과 협업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고, 이는 송파 지역을 실험 무대로 삼는 개념적 ‘예술단지(Art Complex)’ 구상으로 발전하였다. 이 ‘단지’는 실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창작자들이 사회적 역할과 창작 생태계를 함께 고민하는 상징적 구조로 제안되었으며, 그 구체적 실현으로 ‘아트나바다’와 ‘송들바람’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본 연구의 수행자는 2022년 초창기부터 예술단지에 참여하였으며, 3년간 예술인으로서, 마지막 1년은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PM)로 예술인들과 협업했다. PM으로서 기획의 방향 설정, 사업 구조 설계, 지역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조정, 실행 가능성 검토 등 문화기획의 전반을 진행했다. 특히,

31) 최민정, “경력단절 여성 지원정책의 현황과제 = Supporting Policies for Career Interrupted Women: Current Status and Policy Task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15년 9월 통권 제227호 (2015. 9): 62-73.

송들바람 프로젝트에서는 청년 예술인과 지역 자원의 사회적 맥락을 해석하고 이를 창작 활동과 연결하는 예술인들과의 실험적 프로젝트에서 필수불가결인 시행착오와 조율 과정을 겪었다.

2.1 2023 2024 아트나바다: 예술과 순환의 실험

‘아트나바다(아트와 나, 부산물의 바다)’는 2022년 송파 예술단지 프로젝트의 실험적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다.³²⁾ 예술단지 초기는 참여 예술인과 재단 상호 이해와 방향 조정을 위한 대화가 필요한 시기였다. 청년 예술인들은 약 8만 원 수준의 네트워킹 참여 활동비에 비해 사업 목적과 기대성고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혼란을 느꼈다.³³⁾ 이에 재단은 네트워킹 참여를 통해 예술인 스스로 기획 방향성을 모색하길 바랐다. 그러나 이는 기획 경험이 부족한 예술인에게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었다. 결국 양측은 단기적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 실험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로 프로젝트의 형식을 조율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23년 참여 예술인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한 결과물이 ‘아트나바다’였다.³⁴⁾ 2023년 봄 ‘아트와 나, 부산물의 바다’라는 의미를 담은 이 프로젝트는 창작부산물 나눔과 순환을 주제로 시민과 예술인을 연결하는 축제로 기획하기 시작했다. 2번 자문회의(행화당을 운영한 서상혁 감독과 피스오브피스 천근성 작가)를 포함해 약 4개월간의 회의를 거쳐, 2023년 가을 송파문화재단 앞 송파근린공원에서 축제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예술인 전시와 벼룩시장, 피아노 버스킹, 어린이 체험놀이(오너먼트, 악기 만들기 등), 리사이클링 악기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행사 이후 예술인들은 ‘당일 현장 참여율이 높아 분위기가 좋았다.’ ‘덕분에 현장 분위기가 좋았지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처음에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였다.’ ‘현장감 있는 프로젝트였다.’ ‘야외 행사가 처음이라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예술단지 참여인과 함께하여

32) 송파문화재단, 2022 송파 예술단지 프로젝트 결과 자료집 (2022)

33) 송파문화재단, 위의 결과 자료집 참조, p.38. A/S 요청 좀 더 세세한 계획과 R&D를 꾸리고 몇 가지 중심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역할이 분명해지고, 성취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예술단지 내에서 다양한 협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4) 송파문화재단, 2023 송파 예술단지 프로젝트 결과 자료집 (2023) p.8. 예술인이 동료 예술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여는 <아트나바다> 예술인은 최종 작품 제작을 위해 많은 시행 착오를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들의 양이 상당하다. 자원을 아끼고 타 예술가의 시행착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술 부산물을 되팔 수 있는 ‘아트나바다 운동’을 진행한다.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가족 단위 방문을 타깃으로 기획했으나 현장이 어린이 중심으로 치우쳐 아쉬웠다.’³⁵⁾ 등 소회를 남겼다. 이처럼 다양한 피드백에도 불구하고, 아타나바다는 창작 실험으로서 의미있는 시도였으며, 예술단지의 방향성과 예술인 자율적 기획 역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장에 참여한 예술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비록 완성도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실험으로서의 기획 의도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졌다.³⁶⁾ 특히 주목할 점은 행사 관람자 중 어린이의 비중이 성인보다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참여 예술인 중에서 육아 경험이 있는 연구자의 자발적 홍보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공공기관으로서 재단의 홍보 시스템은 내부 절차상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송파예술단지 프로젝트에서는 실질적으로 참여 예술인이 직접 홍보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다수의 예술인은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결망이 약했고, 동시에 창작 활동으로 인한 물리적·정신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는 ‘아트나바다’를 상징하는 조형물 제작 외에도 홍보 업무를 자처하였다.

홍보는 생활 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행사 장소 인근의 초등학교, 도서관,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엘리베이터 및 공용 게시판에 포스터 부착을 요청하였고, 각 기관의 협조로 이를 실행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연구자는 평소 출산·육아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가입해 있던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학부모 카페 등)를 활용하여, 행사 내용을 소개하는 홍보 게시글을 직접 작성하고 게시하였다.

육아 경험에서 얻은 행사 참여 패턴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전면에 배치해 홍보하는 것이 가족 단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지역 기반 시설은 포스터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어린이 중심의 홍보 전략은 행사 참여 연령대 구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

2.2 송들바람: 거리예술 문화기획

연구자가 PM으로 참여한 2024년 송파 예술단지에서는 2023년 ‘아트나바다’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문화예술시설과 공공미술 작품 분포도를 조사하였다.

35) 송파문화재단, 2022 송파 예술단지 프로젝트 결과 자료집 (2022), p.28.

36) 송파문화재단, [송파예술단지] 2023 아트나바다 행사 결과영상, 2024년 1월 11일, video, <https://youtu.be/wWoUsKNf1a8?si=POwp9Sx8lWoZT4no>

이를 통해 송파구 내 비교적 문화예술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2년간 사업에 참여한 연극인과 공연 기획자, 음악 예술인 등 팀 기반 작업을 제외하면 개인 창작 활동에 집중하는 예술인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과 유사한 창작 환경에 놓인 예술인과 네트워킹하는 경험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밝혔다.³⁷⁾

연구자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정보를 맞닿아 예술인들이 지역문화 연구를 통해 서로 협업하는 과정을 구상하고, 이 기획 자체가 예술 생태계 구축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통찰로 이어졌다. 도출된 생각은 개인 작업에 익숙한 예술인을 모집해 타인과의 협업을 요구하는 문화기획 영역으로 그들의 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인을 단순한 창작자에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획자로 전환시키려는 실험적 시도이자, 창작 기반 예술 생태계를 다층적으로 구축하려는 예술단지의 기획 의도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송파문화재단 측과 약 두 달 간의 의견 교환 끝에 ‘송들바람’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송파구 내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와 창작-기획 간 전환(Switch) 실험을 시도했다. 한편, ‘아트나바다’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속 요청에 따라, 두 프로젝트는 2024년 동시 운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송들바람’은 전시나 공연장이 아닌 거리나 공원에서 시민들에게 거리예술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목적과 예술인이 지역 문화자원 조사, 공간 리서치, 주민 인터뷰, 자체 콘텐츠 개발 등 문화기획자로 발돋움하는 기회를 제공하려 했다. 참여에 선정된 6인 예술인은 송파구 일대 야외공간을 무대로 다양한 예술 장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창작을 시도했다. 회화작가인 장영준은 주민참여형 워크숍으로 풍납동의 유물을 연구하여 ‘흐르는 돌’이라는 주제로 백제인의 우물과 그릇에 담긴 이별법을 참여자들과 함께 되짚으며 물의 형태와 유사한 레진(에폭시수지)을 이용한 아트워크숍을 만들었고, 공간유보(2인 청년예술인)은 ‘풍납잔치, 다섯 번째 바퀴(시민 참여형 설치)’는 허물어진 담벼락 위 시멘트 테이블을 설치하고 풍납시장에서 구매한 전과 막걸리를 지역 동네어르신들과 함께 마시며 상호 교류하고 소통하는 잔치를 기획했다. 한가은 연극인은 ‘눈송이 요정들의 고민 상담소’는 청소년 비율이 높은 문정동에 사는 주민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속에서 일상 속 고민을 풀어주는 연극’을 만들었으며 영화인이자 미디어 아티스트인 윤정인은 ‘가락시장을

37) 송파문화재단 2023 송파 예술단지 프로젝트 결과 자료집 (2023) p.27.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24시간 일(작업)을 하게 되는데 워라밸이 맞지 않는 삶에 우울해지기 쉽다. 하지만 예술단지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었다.

담다'는 수십 년간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아 온 문화유산인 가락시장에서 현직자와 퇴직자 그리고 가락시장 현재 모습을 아카이빙 흑백 영상으로 제작하여 가락시장 지하철역 입구에서 상영했다. 공연예술창작소 호밀은 피지컬 움직임 놀이극 '피지컬 무브멍 놀콩: 마천동 성내천에서' 마천동 즉 '말마'자와 '내천'자로 이뤄진 동명에서 아이디어 착안, 말 형상을 한 소품과 말 행동을 연상시키는 공연을 기획했다. 동화 작가이자 일러스트 작가인 올릿(김수연)은 오금동에 위치한 송파도서관에서 체험형 전시 '오금쉬어마실'에서 조용한 도서관이 사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치열한 곳이 아닐까 하는 아이디어로 세 가지 섹션 체험형 전시를 제작했다.³⁸⁾

이와 같이 송들바람은 결과적으로 예술인이 기획자로서 다양한 불거리를 만든 실험적인 프로젝트였다. 지역에 있던 가락시장과 송파도서관, 송파청소년센터는 연구자의 협업 제안으로 연계되었다. 가락시장을 연구하고 싶던 예술인은 낮은 도매 시장 분위기와 해당 작업에 요하는 가락시장 관계자를 찾을 수 없었는데, 육아로 시장에 자주 방문하던 연구자의 인연으로 인터뷰 촬영과 야외 영상 방영이 허락되었다. 그리고 일러스트 작가의 송파도서관 전시는 기관 성격 상 이미 계획된 프로그램 구성이 연간으로 꽉차있었으나 가족단위 관람자를 대상으로 예술인과 지역 문화기관의 협업이라는 점에서 공간 대여의 유연함을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송파청소년센터는 많은 어린이·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었다. 그 결과 투어별 30명의 온라인 사전예약은 마감되었으며 총 관람 인원은 150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예술인이 지역문화자원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고 관련된 역사와 배경을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인프라는 지역 문화 커뮤니티 활용을 이끄는 핵심 축이 되었다. 연구자, 한 개인 사례인 경력단절 여성의 문화기획자 전환은 그 비율이 낮은 케이스이지만 이런 과정이 구조화된다는 가정 하에 송들바람으로 도출된 문화기획자와 예술인의 역할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6인 예술인의 창의적이고 자기표현적인 작품이 막상 '기획자'의 구조에 들어갔을 때 조금씩 부딪치는 경우가 존재했다. 이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끝나고 참여 예술인이 다수가 기존 작업에서 벗어나 기획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표명했고, 기획자로 확대되는 과정이 예술인 본래의 자율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문화기획 영역이 창작과 또 다른 전문성과 태도를 요구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예술인과 문화기획자 실행력 사이의 간극을 알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38) 송파문화재단, 2024 송파 예술단지 프로젝트 결과 자료집, (2024), pp.8-21.

2.3 두 사례로 본 문화기획자의 의미

‘아트나바다’와 ‘송들바람’ 사례를 통해 문화기획자의 역할은 단순한 행정 수행자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지역 사회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생태계 안에서 지역의 문화자원과 시민들의 니즈를 연결하는 목표를 가진 설계자이자 조율자로서 도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능력은 감성이나 창의성보다 기획력, 실행 가능성, 관계 형성, 공공성에 기반을 둔 판단력으로 설명된다.

	문화 기획자	예술인(창작자)
주요 역할	프로젝트 설계, 운영, 자원 연계, 커뮤니티 조정	예술 콘텐츠 창작, 표현, 공연/전시 실행
목표	기획 목적에 부합하는 구조와 경험을 디자인	창의적이고 자기표현적인 작품 완성
출발점	사회적 요구, 지역 자원, 정책 방향 등	개인적 관심, 미학적 탐구, 주제적 영감
작업 방식	다자 간 협업 조정, 예산 관리, 일정 통제	예술적 기법 활용, 직관과 감성에 집중
중심 가치	관계 형성, 실행 가능성, 공공성	표현 자유, 창의성, 독창성
성과 측정	참여도, 지속성, 공동체 기여, 영향력	예술적 완성도, 감동, 비평적 평가

물론 창의성과 실행력이 결합된 예술인도 존재한다. 이들은 감각적인 아이디어를 설득력 있는 언어로 설명하며 논리적 기획안을 구성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술인은 관계자 설득, 예산과 일정 조율 등의 행정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반면 경력단절 여성은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역에 있는 자원과 사회적 요구에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다. 향후 정책 방향과 육아로 형성된 관계 형성의 중요성까지 경력단절 여성은 문화기획의 해당하는 자질을 일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구상과 재원이 마련된다면 지역 문화 발전과 예술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3. 결론: 경력단절 여성의 문화기획자 전환 가능성과 그 의의

본 연구에서 ‘아트나바다’와 ‘송들바람’을 기획한 연구자는 지역 네트워크 경험을 통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개인의 경력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초기 프로젝트에서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읽고, 재단과의 협업을 조정했으며 중간 과정에서는 지역자원과 예술인을 연계하는 모습에서 프로젝트의 공공성과 실행 의도를 가져갈 수 있도록 대화하며 지역 자원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요구를 함께 해석하고 논의하면서 예술인이 창작 활동과 연결되는 과정을 섬세하게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지역 문화의 다층적 의미와 지역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여 예술인과 현장에 적절한 창작을 배치하는 문화기획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 과정에는 한 사람의 결과만이 아닌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민참여형 문화기획의 구조와 과제를 다룬 제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연구’³⁹⁾를 참고하면 첫 번째로 문화자치 및 분권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지역문화 협력 전달체계를 보완해야 하며 특히 지역문화 재정 확충을 정책 여건의 중요한 사항으로 명시했다. 또한 문화자치와 문화분권으로 3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역의 문화 체감도는 실제와 다름을 강조하며 문화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 내 기부금⁴⁰⁾을 문화재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배치 및 역량 강화를 제의했는데, 여기서 살펴 볼 중요한 대목은 경력단절 여성을 문화기획자로 교육하는 방안이 동시에 운영된다면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구직여건 증가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이는 경력단절 여성의 진로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문화기획은 전공과 연령, 과거의 직무경험과 상관없이 진입 가능한 구조적 여지가 크며, 다양한 삶의 경험이 오히려 기획의 질적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 특히 다면적 소통, 조정력, 상황 판단력, 실행력 등은 경력단절 여성이 기존 사회경험을 통해 축적한 역량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실제 본 프로젝트에서 연구자는 예술인과 재단,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기획이 단순한 업무 실행이 아닌, 문화생태계를 조율하는 복합적 책임을 져야 하는 역할임을 체감하였다. 문화기획 진입이 단순한 보조직무가 아닌 고도화된

39)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연구, (2019), pp.44-78

40) 문화체육관광부, 위의 연구서 참조.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지역 활성화나 지역민의 삶의 질을 위한 문화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전문성 직군으로 사회적 가치와 개인의 전문성이 만나는 교차점이 될 수 있음을 또한 시사한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직군이 단순 노무직에 집중되는 현실⁴¹⁾을 고려할 때, 문화기획과 같은 전문 분야 진입을 위한 공공 지원 역시 필요하다. 첫째, 기획 경험이 부족한 참여자를 위한 멘토링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축, 둘째, 공공사업에서의 기획자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조화와 보상 체계 확립, 셋째, 예술인과 기획자의 역할 구분과 협업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은 지역 기반의 문화생태계 구축에 실질적 기여를 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결국, 문화기획은 경력단절 여성에게 있어 일자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사회와 다시 연결되고, 자신만의 경험과 감각을 공공적 가치로 전환하는 과정이자, 삶의 균형과 자아 실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유연한 경로가 된다. ‘아트나바다’와 ‘송들바람’의 사례는 단지 프로젝트의 성과를 넘어, 문화기획이라는 실천이 어떻게 개인의 경로 전환과 사회적 의미를 함께 성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4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2008), p85.

■ 참고문헌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연구, (2019)
- 송파문화재단, 2022 송파 예술단지 프로젝트 결과 자료집 (2022)
- 송파문화재단, 2023 송파 예술단지 프로젝트 결과 자료집 (2023)
- 송파문화재단, [송파예술단지] 2023 아트나바다 행사 결과영상, 2024년 1월 11일, video,
<https://youtu.be/wWoUsKNf1a8?si=POwp9Sx8lWoZT4no>
- 송파문화재단, 2024 송파 예술단지 프로젝트 결과 자료집 (2024)
- 여성가족부,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여성가족부, 2023)
- 최민정, “경력단절 여성 지원정책의 현황과제 = Supporting Policies for Career Interrupted Women: Current Status and Policy Tasks”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15년 9월 통권 제227호 (2015. 9)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2008)

과세부터 탈세까지 미술품과 박물관을 둘러싼 조세 제문제

-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을 중심으로 -

김별다비

경정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1. 서론

미술품은 단순한 자산을 넘어 예술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동시에 지닌 특수한 형태의 재산이다. 이러한 미술품이 기증이나 후원이라는 방식으로 박물관, 미술관, 예술단체에 귀속될 때, 사회 전체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미술품은 그 고가성과 비시장성으로 인해 탈세, 자산은닉, 불법자금 세탁 등의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은 미술품과 박물관을 둘러싼 조세제도가 공공성과 조세형평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모색하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

한국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와 후원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해왔으며, 최근에는 상속세 물납제도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일부 도입하여 제도 개선의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여전히 공제율의 한계, 기부금 단체 등록의 까다로움, 세부 시행령의 미비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유인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제도적 현실을 분석하고, 미국·프랑스·독일·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문화예술 관련 조세정책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예술 기부와 관련한 조세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미술품 기증이나 문화예술 후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 등 조세 전반에 걸친 제도적 분석을 통해, 제도의 정당성, 실효성, 공익성, 그리고 제도 간 정합성을 아우르는 종합적 고찰을 시도한다.

2. 미술관 박물관에 대한 미술품 기증, 금전이나 물품의 후원 시 조세문제와 개선점

가. 한국의 제도

1) 법제현황과 문제의식, 미술품 기증과 미술분야 후원시 조세지원의 정당성

① 법제 현황

한국은 2013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을 제정하여 문화예술 기부를 제도적으로 장려하고자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도 일부 세제 감면 근거가 마련되었다. 해당 제도에 따라 미술품을 기증하거나 예술단체에 후원하는 경우, 기부금 세제 혜택이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기부금은 크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된다. 국공립 미술관, 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대한 기부는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의 100%(개인), 50%(법인)까지 공제 가능하다. 반면 등록 미술관이나 민간 예술단체에 대한 기부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법인은 1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비사업자 개인의 경우 미술품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는 해당 미술품의 구입가를 기준으로 손금 산입이 적용된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2021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미술품과 문화재에 한해 상속세 물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고 이건희 회장의 대규모 미술품 기증 이후 추진된 제도로, 상속세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2025년 5월 현재까지도 세부적인 시행령과 심의 절차가 정비되지 않아 실질적인 적용 사례는 없는 상태이다.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에 미술관자료로 기증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라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대상이 된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문화예술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지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절차가 여전히 까다로워 많은 단체들이 등록을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② 문제의식

현행 조세지원 제도는 기초적인 법적 구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유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공제율의 제한성이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간의 공제한도 격차가 크고, 전체적으로 공제율이 낮아 고액 기부를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특히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는 다수의 민간 예술단체에 대한 기부는 실질적인 감세 혜택이 미미하여 기부자 입장에서 매력적이지 않다.

두 번째는 기부금 단체 등록 절차의 경직성이다.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복식부기, 활동 실적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은 소규모 단체나 지방 문화기관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된다. 이로 인해 많은 예술단체가 등록을 포기하거나, 등록 이후에도 혜택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는 상속세 물납제의 실효성 문제다.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미술품 물납이 가능해졌지만, 문화재청 및 국세청 등 심의 절차가 까다롭고 명확한 가치평가 기준이 부족하여 실제 납부 수단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미술품의 감정제도 정비와 실무상 절차 간소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관련 법령과 세법 간의 연계성이 미흡하다. 「문화예술후원법」은 후원 장려를 목적으로 조세감면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효성 있는 특례 규정이 부족하다. 법체계 간 정합성 부족은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해치며,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③ 조세지원의 정당성

문화예술에 대한 조세지원은 헌법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된다. 헌법 제9조는 ‘문화국가’를 지향하며, 제22조는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근거는 국가가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예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조세정책을 통해 간접적 지원을 수행할 책무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문화예술은 고전적 시장실패의 사례로, 공공재적 성격과 외부효과가 크다. 창작 활동은 사회 전반의 창의성과 정신적 복지를 증진시키며, 도시 재생, 관광 산업, 교육 등 다양한 부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세를 통한 간접적 지원은 예술 후원을 유도하여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기부는 개인의 사적인 선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띤 행위로서 정

부가 정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영역이다. 특히 기부에 대한 조세 감면은 단순한 세금 혜택이 아니라, 공익 기여에 대한 국가의 간접적 보상이며 정책적 유도장치다. 이는 민간의 자원을 공공 목적에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이며, 정부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한다.

더욱이, 최근 연구들은 정부의 공공지원이 민간기부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실증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공공지원을 받은 예술단체에 대해 민간이 신뢰를 갖고 기부를 확대하는 ‘구인효과’는, 조세 지원과 직접 보조가 병행될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문화예술 기부에 대한 조세 감면은 조세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공익적 정당성을 가지며, 단순한 예산정책이 아니라 문화국가로서의 정체성과 국민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 현황

가) 기증이나 후원한 개인 또는 법인의 조세지원

(1) 소득세 감면

① 기부금 및 후원의 유형 분류와 기본 구조

개인이 미술품을 기증하거나 문화예술단체를 후원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광고성 스폰서십’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과세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기부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상 제공이 원칙이며, 뚜렷한 반대급부가 없어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88조에 따라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반면 기업이나 개인이 예술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로고 노출, 초청, 홍보성 언급 등 실질적인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경우는 ‘스폰서십’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부금이 아닌 광고 또는 용역 계약으로 해석되며, 비사업자 개인에게는 소득세법상 아무런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이를 광고선전비나 접대비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으나, 기부금공제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법적으로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경제적 거래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세제 적용의 핵심 기준이 된다.

② 공제 방식: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기부금에 해당하는 후원은 납세자 유형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로 나뉘어 적용된다. 비사업자 개인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2025년 기준 공제율은 연간 기부금 1천만 원 이하의 경우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이다. 2024년 한 해 동안은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40%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종료되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기부금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근거한다. 반면, 광고성 스폰서십은 기부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의 경우 광고비로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하나, 비사업자 개인은 세제 혜택이 없다.

③ 공제한도 및 이월공제

기부금은 해당 연도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까지 공제 가능하며,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이월공제를 통해 향후 10년간 차감이 가능하다.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 가능하며,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까지 공제가 허용된다. 이월공제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어 적용 중이다.

이러한 공제는 기부금에만 적용되며, 스폰서십 후원은 기부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공제한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스폰서십이 실질적으로 대가성 거래일 경우, 이는 조세 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 경비로 취급된다.

④ 적용 대상 단체 및 스폰서십 구조의 과세상 위치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 대상 단체가 법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문화예술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천을 받은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을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정 시에는 공익 목적 수행, 회계 투명성, 정기 보고 등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에 대해 별도의 등록 없이도 기부금 모집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금으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반대급부가 없어야 하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광고성이 있는 경우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로고 노출, 상품 제공, 보도자료 언급 등이 있는 경우 과세당국은 후원금 전액을 용역 대가로 보아 세제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단체가 후원을 받을 때는 그 계약 구조가 순수 기부인지, 스폰서십 형태의 대가성 거래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과세상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

(2) 법인세 감면

① 기부금 및 후원의 유형 분류와 기본 구조

법인이 문화예술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지출이 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 혹은 '업무 관련 비용'이나 '광고성 지출'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세 감면 여부가 달라진다. 현행 「법인세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문화예술 관련 기부금은 대부분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는 과세표준의 10%에 불과하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손금산입 한도가 50%까지 허용되지만, 문화예술단체는 일반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관련 기부금에 대해 일반기부금이 아닌 '특례기부금'으로 별도 분류하여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하거나 세액공제를 병행 적용해야 한다는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었는지 여부, 해당 기부금이 무상 제공이고 반대급부가 없는 순수 기부인지 여부는 손금산입 여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② 손금산입 방식 및 한도

법인이 예술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1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반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50%까지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다만, 대부분의 문화예술단체는 법정기부금단체가 아닌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문화예술단체에 기부할 경우 사실상 손금 인정 한도가 10%로 제한된다.

기업이 비영리 문화예술 법인에 기부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정기부금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일부 문화접대비나 문화업무추진비 또한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허용되지만, 해당 항목들은 별도의 회계 분류 및 입증요건이 존재하며, 그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이 있다.

③ 미술품 기증 및 구입에 대한 손금산입

법인이 미술품을 기증하거나 사내에 비치하기 위해 구입한 경우, 해당 지출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라 업무무관 자산으로 간주되어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다. 다만, 미술품의 구입가격이 500만 원 이하이고 사무실 등 공용 공간에 비치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해당 기준은 2016년 이후 유지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 금액 기준이 비현실적이며 최소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미술품을 기증하는 경우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기증처가 지정기부금단체일 경우 앞서 언급한 10%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이 발생한다.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미술품 기증액의 일정 비율을 균등 공제하는 방식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와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④ 문화업무추진비 및 창작연구소 관련 세제 혜택

법인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일부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항목의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며, 한도 역시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혜택은 크지 않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통해 일부 기업부설 창작연구소나 문화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다수 일반 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문화업무추진비에 대해 손금산입 한도를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제도 자체를 영구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업의 중장기적 후원을 유도하고, 문화정책의 민간 파트너로서 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3) 상속세 증여세 감면

① 상속세 및 증여세 기본 구조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체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과세되며, 기본공제(2억 원),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원), 일괄공제(5억 원 중 선택) 등의 공제 제도가 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인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며, 직계존비속에 대해 2천만 원~5천만 원, 배우자에 대해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세율은 누진세 구조를 따르며, 상속세는 10%에서 50%까지, 증여세는 10%에서 50%까지 적용된다.

② 공익법인 출연 시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

상증세법은 공익을 위한 기부 행위에 대해 일정한 세제 감면 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공익법인이나 공익신탁에 미술품을 포함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상증세법」 제16조는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8조는 증여자가 공익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감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전제로 한다. 첫째, 수익용 재산 출연은 총 출연재산의 30% 이하이어야 한다. 둘째, 공익법인은 해당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10년간 공익목적으로 직접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징 대상이 된다. 셋째, 회피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의무(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사용 내역 공시 등)를 이행해야 한다.

③ 미술품 기증과 상속세 징수유예 제도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미술품에 대해 징수 유예나 물납이 허용되기도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로 등록된 미술품에 대해서는 상속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이는 고가의 미술품이 일시에 현금화되기 어려운 자산임을 고려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는 미술품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다만, 유예된 세액은 일정 사유 발생 시(예: 미술품의 처분 또는 공공 목적 해제 시) 다시 징수되며, 실질적인 감면이 아니라 일시적 납세유예에 불과하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특별히 지정된 박물관·미술관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미술품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 감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유증, 사인증여와 예술단체 후원에 대한 과세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통해 예술단체에 미술품 등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그 수증자가 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유증을 통해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사례가 적으며, 세제 혜택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절차가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다.

해외의 경우 유증 및 사인증여에 대해 더욱 폭넓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와 유사하게 과세 제외 대상 확대 및 신고 간소화, 사후관리 완화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 부가가치세 감면

① 문화예술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본 구조

한국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또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세 제도이다. 그러나 문화예술 활동은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일부 면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예술가 개인이나 비영리 예술단체가 수행하는 순수 예술 행위에 대해서는 과세보다는 면세 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② 면세 적용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화예술 관련 행위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첫째, 비영리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거나 예술가 개인이 제공하는 공연, 전시, 발표회 등은 예술의 순수성과 비영리성을 인정받아 면세된다. 둘째, 개인이 제공하는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 예술교육 또한 학원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세 대상이 된다. 셋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대여 행위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넷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박물관·미술관 등의 입장료 역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면세는 예술 행위가 비영리적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한정되며, 수익을 목적으로 한 상업적 전시, 유료 강좌, 예술품 판매 등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예를 들어,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판매하거나 문화예술단체가 유료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는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예술가가 개인적으로 창작한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일정 매출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매출세액은 면제되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어 예술인의 세무전략 측면에서 유불리를 잘 따져야 한다.

③ 면세 대상 예외

문화예술 활동이라 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표적으로는 첫째, 영리 목적의 상업적 전시나 대중공연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화랑·갤러리 등에서 예술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일반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셋째, 예술인이 자신의 창작물을 판매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유통하는 경우도 일정 매출 기준을 초과하면 과세된다. 특히 연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 후원과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의 차이

문화예술 영역에서 '기부', '후원', '기부금', '현물기부' 등의 용어는 세법상의 의미가 구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면 여부도 달라진다. 먼저 '기부금'은 금전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지정기부금 단체나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세·법인세상 공제 대상이 되나, 부가가치세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기부'는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급'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 즉, 사업자가 예술작품이나 재화를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에도 그 재화의 시가 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자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국가·지자체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 등 공익적 수익사업자가 아닌 단체에 무상 공급한 경우에는 일정 조건 하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예컨대 공익목적의 미술관, 박물관, 비영리 문화단체에 대한 기부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후원'은 일반적으로 대가성이 있는 거래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기업이 공연 단체에 후원하고 그 대가로 로고 노출, 광고 기획 등을 제공받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후원금은 단순 기부금이 아니라 '대가 있는 공급'으로 분류되어, 공급한 예술단체는 후원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후원인지, 기부인지의 구분은 세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문화예술 단체와 후원 기업 간 계약서에 기재된 목적, 제공되는 혜택, 대가성 유무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이처럼 문화예술 영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활동의 공익성, 비영리성, 대가성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술인 및 단체는 과세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계약 및 회계 처리 시 세법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⑤ 금전 기부, 후원과 물건 기부, 후원의 부가세 부과 차이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상 금전 후원과 물건 후원은 과세 여부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금전 후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이 기본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돈을 기부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없으므로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업이 문화예술단체에 대가 없이 순수하게 후원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세법상 '거래'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물건 후원, 즉 현물 기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신의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급'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해당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출판사가 자사의 도서를 비영리 공연단체에 기증할 경우, 해당 도서의 시가 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과세의 형평성과 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 구조를 고려한 조치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현물 기부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공익목적 단체에 제공되는 재화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공익 목적의 비영리 예술단체나 공공기관에 현물을 기부하고, 그것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하다.

한편, 후원이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로고 노출, 홍보 공간 제공, VIP 좌석 제공 등 어떤 형태로든 대가가 수반될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후원금은 기부금이 아니라 광고 대가로 해석되며, 예술단체는 후원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문화예술단체는 금전 후원과 물건 후원, 그리고 후원행위가 실질적으로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세무 처리를 해야 하며, 후원계약 시 계약서 내용과 실질적인 혜택 제공 여부 부가 세무상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⑥ 면세사업자로서의 유의사항

예술가나 예술단체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는 면제되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전시회나 공연을 준비하며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체의 경우 일반과세자 등록을 택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인이나 관련 단체는 자신의 활동 성격과 수익 구조에

따라 과세 유형을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

나) 기증과 후원받은 예술인, 예술단체의 조세혜택

① 기부금 수령 시 세제 혜택

문화예술단체가 기부금 또는 미술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단체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기부금은 기부자에게 소득세·법인세 감면의 근거가 되므로 간접적으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예술단체 자체에는 기부금 수령 자체에 대해 별도의 과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이는 비영리 공익 목적 단체의 수입으로 분류되어 법인세가 면제된다. 단, 고유목적 이외의 사업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이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실질적인 법인세 감면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 손금산입은 수익의 최대 100%까지 인정되나, 요건 충족 및 사후보고의 무가 존재하며, 실제 적용받는 단체는 전체의 약 1.3%에 불과하여 제도 실효성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③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의 입장료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간접적 세제 혜택으로 해석된다. 또한, 도서, 신문, 잡지, 방송 등의 문화상품 및 예술인의 인적용역 일부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예술단체가 기증받은 미술품이나 후원금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를 통한 별도 부가세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④ 지방세 감면 (재산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해 재산세를 비롯한 일부 지방세 감면 혜택이 존재한다. 이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에 근거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일몰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부동산을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도 면제된다. 감면 대상인 문화예술단체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며, 행정안전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단체도 포함된다.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해당 단체가 직접 고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수이며,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감면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 또는 용도변경할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금이 추징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감면의 범위나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조례의 확인도 필요하다. 요컨대, 현재 한국에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문화예술단체가 고유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해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유효하게 운영되고 있다.

⑤ 직접세 과세 여부

문화예술단체가 기증받은 미술품이나 후원금을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수입은 일반적으로 법인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기본 과세원칙에 따른 것이며, 실제로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고유목적사업 외의 수익사업(예: 전시회 수익, 상업적 이용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해당 수익은 과세될 수 있다.

나. 외국의 제도

가) 기증과 후원한 개인 또는 법인의 조세지원

(1) 소득세 감면

① 미국

미국에서는 개인이 IRS에 등록된 공익법인(501(c)(3))에 미술품이나 금전적 기부를 한 경우, 소득세에서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총소득(AGI)의 30%까지이며, 초과분은 5년간 이월이 가능하다. 기부 대상이 수혜기관의 고유목적(전시·교육 등)에 부합해야

하며, \$5,000 초과 기부는 감정서 제출이 의무이고, \$20,000 이상은 사진 및 감정서 원본까지 IRS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IRC §170 규정에 따른 것이다.

② 영국

영국은 Gift Aid 제도를 통해 금전 기부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개인이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 단체는 기부자의 세율에 따라 소득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고세율 납세자인 경우 차액 환급도 가능하다. 단, 미술품 등 현물 기부는 Gift Aid 적용 대상이 아니며, 대신 'Acceptance in Lieu' 제도를 통해 상속세 납부 대신 미술품을 기증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③ 프랑스

프랑스는 공익단체에 대한 개인 기부 시, 기부금의 66%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며, 연간 소득의 최대 20%까지 적용된다. €1,000까지는 75% 공제가 가능하며, 초과 시 66% 공제가 적용된다. 기부금 초과분은 최대 5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프랑스 조세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제200조에 따른 것이다.

④ 독일

독일은 개인이 공익 목적 단체에 기부할 경우, 연소득의 최대 20%까지 소득세 공제를 허용한다. 이 외에도 문화재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 연 9%씩 10년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독일 소득세법 §10b 및 §10g에 규정되어 있다. 미술품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기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⑤ 일본

일본은 '특정 공익 증진 법인'에 대해 기부한 경우, 기부금 - 2,000엔의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공제한도는 과세표준금액의 40% 또는 총소득금액의 30% 중 작은 금액이다. 일반 NPO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며, 미술품 자체 기부는 별도 세제 우대 규정이 거의 없는 편이다. 공제 제도는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다.

⑥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국립 박물관 또는 문화재 관련 공공기관에 '인증된 문화재(cultural property)'를 기부할 경우, 해당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세에서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자본이득세도 면제된다. 이는 Cultural Property Export and Import Act에 따른다. 일반 기부는 순소득의 7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초과분은 5년간 이월 공제가 인정된다.

⑦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Art Bonus” 제도를 통해 공인 문화기관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3년간 총 기부액의 6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또한 개인 소득세(IRPEF) 기준으로는 문화기부 시 총소득의 2% 한도로 19%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Art Bonus는 특히 고소득층의 예술 후원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⑧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공익목적단체(Public Benefit Entity, PBE)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100%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문화예술 PBE에 대해서는 125%까지 확대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0유로 기부 시 125유로 공제를 인정받으며, 최고세율 52% 기준 시 약 65유로의 세액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추가 공제는 연간 €1,250까지 허용되며, 기부는 신고를 통해 국경 간 단체에도 인정된다.

(2) 법인세 감면

① 프랑스

프랑스는 문화 분야 기부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이다. 법인이 공익 목적의 문화단체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의 60%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세액공제는 연간 매출의 0.5% 한도 내에서 인정되며, 초과분은 최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일정 기준에 맞는 미술품을 구매하여 영구 전시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가상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술 관련 신설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법인세 면제 규정도 존재한다.

② 일본

일본은 기부금의 성격과 수혜기관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진다. 공공기관이나 지정 기부금단체에 대한 기부는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일반기부금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2.5%에 자본금의 0.25%를 더한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미술품 기증의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그 경우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③ 미국

미국은 자선기부금에 대해 법인의 과세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문화재 기증의 경우에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5년간 이월 공제도 인정된다. 기부에 앞서 감정서 및 문화재 인증서 제출이 요구된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는 세제상 일반 자선기부와 유사하게 처리되며, 광고 목적이 없는 후원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④ 캐나다

캐나다는 문화재로 등록된 미술품을 공공기관에 기부할 경우 법인세에서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 때 소득 상한이 없으며, 사전 등록 및 감정 절차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또한 애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기부가 문화산업 진흥의 성격을 띠는 경우 실질적인 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⑤ 영국

영국에서는 기업이 예술단체를 후원할 경우 해당 지출을 광고 목적 비용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순수한 기부의 경우에도 회사의 과세소득에서 차감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광고성이 없는 기부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며, 예술 장르나 수혜기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소 상이할 수 있다.

⑥ 독일

독일은 미술품 관련 법인세 감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부족하나, 일반 자선기부와 동일하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문화 분야 기부에 대해 세금 감면을 제공하지만, 개인 기부자에 대한 제도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기업 후원은 제도화가 미흡한 편이다. 유럽 전체적으로도 법인 기부에 대한 통계나 제도화가 부족한 것이 공통된 문제로 지적된다.

⑦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법인이 문화재 관련 기관에 기부할 경우 총소득의 2%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광고성 후원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산입이 허용되며, 문화재 복원·보존 목적의 기부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문화 관련 기부는 기부금의 공익성과 법적 인정 여부에 따라 손비 처리 또는 세액공제 방식이 달라진다.

⑧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문화 부문 기부에 대해 50% 및 €100,000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 자선기부 외에도 문화 기부에 대해 추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하며, 일부 경우에는 세액공제 방식도 병행된다.

⑨ 세르비아

세르비아는 영화 및 문화 분야 투자 지출에 대해 법인세 소득의 최대 5%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박물관 및 문화재 보존단체에 대한 기부도 감면 대상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부담이 경감된다. 일부 국가는 상장기업이 설립한 박물관에만 제한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⑩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미술품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에 대해 법인세 면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문화 활동의 비영리성과 공익성을 전제로 한 조치로, 기부 자체보다는 활동 주체의 법적 지위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달라진다. 직접적인 미술품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제한적이나, 구조적으로 비영리 기관을 통한 우회적 혜택은 가능하다.

(3) 기증과 후원한 측의 상속세 증여세 감면

① 미국

미국은 공익 목적의 기부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광범위한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기부자가 사망 전에 공익기관(IRS가 승인한 비영리기관)에 미술품을 기부할 경우, 해당 자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사망 후 유언에 따라 유산이 공익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유산세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생전 증여 시에도 기부가 공익 목적임을 충족하면 증여세 면제가 가능하며, 고액 미술품(\$20,000 이상)은 감정자료 제출 등 IRS의 엄격한 요건을 따라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상속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 재산세 부담까지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② 프랑스

프랑스는 “Dation en paiement” 제도를 통해 미술품을 국가에 기부하여 상

속세 또는 증여세를 대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해당 미술품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예술적 가치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며, 문화부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이외에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금액의 제한 없이 상속세·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미술품 기부는 세제상 과세대상 자산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상속인에게 실질적인 세금 부담 완화 효과를 준다.

③ 영국

영국은 “Acceptance in Lieu(AIL)” 제도를 통해 상속세 납부 대신 미술품을 국가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한다. 기부 대상 미술품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예술적·역사적 가치를 지녀야 하며, 공공기관에서 전시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제도는 유산세 대신 실물 기부를 허용하고, 일반 시장가보다 최대 25%까지 유리한 평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부자는 세금 감면을 통해 실질적 이익을 얻고, 국가는 공공 문화자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④ 독일

독일은 예술품을 국가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최대 60%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산은 일정 조건(보존 의무, 공공 전시 등)을 충족할 경우 상속재산에서 부분 또는 전면 제외된다. 독일의 상속세는 수령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차등 적용되며, 기부를 통한 세금 감면은 실질적으로 가업승계와 문화보존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이다.

⑤ 일본

일본은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서 제외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부자가 생전 또는 유언에 따라 미술품을 공익재단, 박물관 등 공공 목적의 기관에 제공하면, 해당 자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단, 기부처가 세법상 인정받은 공익법인이어야 하며, 사후 기부는 유언의 효력으로만 처리되기 때문에 절차상 요건이 중요하다. 증여세의 경우에도 세대 간 자산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감면 제도가 존재한다.

⑥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문화재’로 지정된 미술품의 경우 상속세 면제를 허용하며, 보존 의무를 충족할 경우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미지정 문화재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50% 감면이 가능하다. 상속세는 수령자와의 관계에 따라 4~8%의 세

율이 적용되며,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는 100만 유로까지 공제된다. 미술품의 문화재 지정 여부와 보존 조건 이행 여부가 감면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⑦ 대만

대만은 2009년부터 상속·증여세를 단일세율 10%로 개편하고, 공제액을 대폭 상향하였다. 상속세 기본공제는 NT\$1,200만, 증여세는 NT\$220만이다. 문화재나 공익 목적 기부에 대해 명확한 상속세 면세 규정은 없지만, 세율 자체가 낮고 공제금액이 커 기부에 따른 실질적인 절세효과는 존재한다. 공익 기부를 통한 직접적인 상속세 감면 규정은 미비하나, 제도 전반의 간소화로 인한 기부 장려 효과는 기대된다.

⑧ 기타 국가들

그리스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에 대해 상속세 감면 제도를 인정하며, 터키는 문화재를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한다. 멕시코는 미술품을 세금 대신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며, 공익 기부를 세금 납부 수단(in lieu of tax)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들 국가들은 기부자의 공공 기여를 세금 측면에서 적극 보상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3) 상속세 증여세 감면

① 미국

미국은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에 대해 가장 광범위한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증자가 생전에 미술품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자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후 기증의 경우에도 유산세 공제가 적용된다. 배우자에게는 무제한 상속 공제가 적용되며, 그 외 수증자에게는 연간 면세한도(\$14,000, 2013년 기준)가 있다. 공익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IRS가 승인한 비영리기관이어야 하며, 기부 목적도 예술 진흥·교육·복지 등 공익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고액 미술품은 감정평가서 제출이 필수이며 허위 감정시 공제가 부인된다.

② 프랑스

프랑스는 ‘Dation en paiement’ 제도를 통해 미술품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적 예술·역사적 가치가 있는 작

품을 국가에 기증함으로써 상속세를 대체할 수 있게 한다. 문화부의 승인과 공공기관 전시 가능성 등이 요건으로 요구된다. 이 외에도 공익단체에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생전 또는 사후의 유산 기부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③ 영국

영국은 “Acceptance in Lieu (AIL)”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산세를 대신하여 국가에 미술품을 기증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요건은 해당 미술품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기증 후 공공기관에 전시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면 적용 시, 단순 시장가보다 최대 25%까지 유리한 공제평가가 가능하다. 이는 사망 시점에서의 유산 기증에 한해 적용되며, 생전 기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④ 독일

독일은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을 일정 조건 하에 상속세 전면 또는 부분 면세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조건으로는 일정 기간 이상 보유, 공공 전시 제공, 보존 관리 등의 요건이 포함된다. 특히 국가에 기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최대 6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과세등급이 달라지고, 등급별로 공제액이 차등 적용된다. 1등급(배우자, 자녀)의 경우 각각 50만 유로, 40만 유로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⑤ 일본

일본은 상속세에 대해 기본공제(3천만 엔 + 상속인 수 × 600만 엔)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까지 전액 공제를 허용한다. 공익적 기부의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에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립 미술관 등 비영리기관에 기증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특히 문화예술 진흥 목적이 명확한 경우 감면 폭이 확대된다. 다만, 유언에 의한 기부(testamentary gift)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상속 후 자율적으로 기증한 경우에는 12개월 이내 기증 시 공제가 가능하다.

⑥ 대만

대만은 2009년 세제 개편을 통해 상속·증여세에 대해 단일세율 10%를 도입하였다. 상속세 기본공제는 NT\$1,200만, 증여세는 NT\$220만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통합과세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는 면세 또는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문화재적 성격이 있는 미술품에 대한 기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조건은 세부 시행령에 따른다.

⑦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문화재'로 지정된 미술품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거나,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보존 의무를 이행하고 공공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2001년 법률에 따르면 역사적·문화적 가치 있는 부동산의 증여는 면세가 가능하나, 수혜자가 가까운 친족이 아닌 경우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된다. 상속 시 별도 목록이 없는 경우, 주택 내 미술품은 상속가액의 10%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다.

⑧ 그리스

그리스는 문화적 가치가 높은 유산에 대해 상속세 감면 제도를 적용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품을 국가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며, 이는 문화재 보호 및 공공 전시를 조건으로 한다. 관련 제도는 유럽연합 문화유산 보호 규범과 연계되어 운용된다.

(4) 부가가치세 감면

① 미국

미국은 연방 차원의 부가가치세(VAT)가 없고, 각 주에서 매출세(sales tax)를 부과한다. 미술품을 공익 목적의 비영리기관(501(c)(3) 단체 등)에 기부하는 경우, 이는 판매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매출세가 면제된다. 기부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해당 미술품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자본이득세나 유산세도 면제된다. 단, 기부가 상업적 대가(예: 광고)와 연결되면 스폰서십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② 프랑스

프랑스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20% 부과하나, 문화재 기부와 관련하여 "Dation en paiement" 제도를 통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후원에 상업적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미술품 판매자는 특례세율(5.5%)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기부에는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③ 독일

독일은 2025년부터 미술품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존 19%에서 7%로 인하하였다. 공익 목적의 미술품 기부는 대가 없는 무상이전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박물관, 미술관, 연구기관 등 공익기관에 대한 기증은 면세 처리된다. 단, 기부자가 이름을 알리거나 광고 효과를 받는 경우에는 ‘대가성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

④ 일본

일본은 소비세(부가가치세에 해당)를 10% 부과하며, 무상공급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익 목적의 기부는 대가성이 없을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술단체나 공익법인에 기증한 미술품은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기업이 광고 효과를 목적으로 기부를 한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된다.

⑤ 영국

영국은 부가가치세를 20% 부과하나, 국가기관에 미술품을 기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Acceptance in Lieu’ 제도를 통해 상속세 대신 미술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부가세 면제가 적용된다. 예술단체에의 후원이 순수한 기부로 간주되면 면세되나, 명칭 노출 등 대가성이 있으면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무상기부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⑥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부가가치세 기본세율 22%를 적용하지만, 문화재로 지정된 예술품을 국가기관에 기부할 경우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미술품은 무상 기증이라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증 기관의 공익성 여부와 작품의 지정 여부가 면세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⑦ 캐나다

캐나다는 GST/HST 제도를 운영하며, 문화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을 지정 공익기관에 기부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Cultural Property Export and Import Act’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자산을 등록된 공익기관에 기부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아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후원과 광고가 결합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된다.

⑧ 대만

대만은 5%의 단일 부가가치세 체계를 운영하며,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는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이다. 미술품을 문화기관이나 공익법인에 기증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으며, 단체가 상업적 용도로 이를 활용하지 않는 한 면세가 유지된다. 후원에 상업성이 포함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된다.

나) 기증과 후원받은 예술인, 예술단체의 조세혜택

① 미국

미국에서는 501(c)(3) 조항에 따라 비영리로 등록된 예술기관은 연방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된다.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받은 미술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지방세인 재산세 면제는 주 법령에 따라 상이하하며, 일부 주에서는 문화지구 내 예술 활동에 대해 판매세를 면제한다. 또한, 미술품이나 자산을 공익단체에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된다. 단, \$20,000 이상의 미술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자료 제출이 요구된다.

② 프랑스

프랑스의 공인된 문화기관 및 박물관은 기부받은 작품에 대해 상속세·증여세 면제가 가능하다. 박물관이 직접 구매하는 미술품에 대해 특례 부가가치세 세율(5.5%)이 적용될 수 있다. 예술기관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Dation en paiement” 제도를 통해 상속세나 증여세 대신 미술품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예술적 또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경우에만 인정된다.

③ 영국

영국의 비영리 예술단체 및 문화기관은 HMRC에 등록 시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가 가능하다. 기부자는 Gift Aid를 통해 기부금에 대한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Acceptance in Lieu (AIL)” 제도를 통해 유산세 대신 미술품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된 작품은 공공기관에서 전시 가능해야 한다. 세금 감면액은 일반 시장가보다 최대 25%까지 유리하게 평가된다.

④ 일본

일본에서는 공익 목적 기부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면세 또는 감면 제도

를 운영한다. 공익재단이나 박물관 등 지정 수증기관에 대한 기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유증 또는 상속재산 중 일부를 해당 기관에 기부할 경우 과세 제외가 가능하다. 법인세율은 30.62%이며, 고정자산세 감면 제도가 있으나 미술 관련 명시는 없다.

⑤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미술품에 대해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는 보존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 전면 비과세가 가능하며, 미지정 문화재의 경우에도 50% 감면이 인정된다. 법인세율은 24%이며, 공공 미술기관에 현금 기부 시 65% 세액공제(Art Bonus 제도)가 존재한다.

⑥ 대만

대만은 2009년 상속·증여세를 단일세율 10%로 개편하면서, 공제액도 대폭 상향하였다. 공익 목적 기부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확한 면세 규정이 없지만, 세율이 낮고 기본공제가 높아 실질적으로 세 부담이 낮다. 법인세율은 20%이며, 문화재 기부와 관련한 별도 면세 제도는 미비한 편이다.

⑦ 터키

터키는 특정 문화재를 기증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을 제공하며, 문화재에 대해 재산세 면제를 적용한다. 법인세율은 25%이며, 예술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 한국의 제도의 개선점

1) 기증과 후원하는 측

① 소득세 감면

현행 제도는 기부와 스폰서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문화예술계에서는 이 두 형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문화예술단체는 기부금만으로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우며, 후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간접적 대가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 제도의 괴리로 인해 상당수 후원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민간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지원이 세제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비사업자 개인의 경우, 세액공제 방식은 납부세액 자체가 작을수록 효과가 작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고소득층에만 실질적 혜택이 집중된다는 형평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부금 공제 방식에 대한 선택권 부여, 고액 기부에 대한 누진적 공제율 도입, 기부금 공제 대상의 확대 등이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기된다.

문화예술단체의 입장에서조차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복잡하여, 실제로는 많은 단체들이 등록을 포기하거나 등록 후에도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현실은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기부 활성화에 저해한다.

여러 국가들은 예술 분야 기부에 대해 대부분 과세소득 공제(deduction) 또는 산출세액 공제(credit) 방식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국,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고액 기부에 유리한 공제 한도와 감정평가 요건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 자산의 공익적 환원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유럽 다수 국가는 미국보다 공제 범위는 제한적이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세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 인증 절차를 엄격히 운영 중이다.

향후에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기부인지 스폰서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익성이 확인된다면, 제한적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적 융통성이 필요하다. 헌법 제9조의 문화국가 원리와 제22조의 예술의 자유 보장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지원 행위 전반에 대한 세법상 해석과 적용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② 법인세 감면의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현행 제도는 문화예술 분야 기부를 일반적인 지정기부금으로 취급하고 있어 손금산입 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다. 기업이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려 해도 세제상 유인이 크지 않으며, 실질적인 후원을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특히 미술품 기증 및 구입에 대한 손금 인정 기준이 낮고 까다로워, 기업의 문화예술 컬렉션 또는 공공문화 기여 활동에 제약이 크다.

또한 문화업무추진비나 문화접대비의 손금 인정 범위가 좁고, 인정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제 기업이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 문화예술 기부를 일반기부금과 구별되는 ‘특례기부금’으로 별도 분류하고, 손금산입 한도나 세액공제 방식의 병행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법인세 감면 제도는 문화예술 분야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조세 인센티브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부에 대해 법인세 손금산입

이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문화예술단체나 공익기관에 대한 순수 기부는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광고 목적이 명확한 스폰서십은 전액 사업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국가에 따라 공제율, 한도, 요건, 인정 방식이 상이하며, 일부 국가는 문화재나 예술품의 기부에 대해 별도의 특례를 부여한다.

문화예술 관련 법인세 감면 제도는 기부의 공익성, 수혜기관의 성격, 후원과 기부의 구분, 감정평가 및 등록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국의 문화정책 및 조세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향후에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법인의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문화예술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최소 20%까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미술품 기증에 대해서는 프랑스식 균등 공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셋째, 미술품 구입비 손금 인정 한도를 현행 500만 원에서 현실화된 금액(예: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넷째, 문화업무추진비 제도를 명확히 정비하고, 손금 인정 범위와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은 문화예술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고, 헌법 제9조에 규정된 ‘문화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감면 제도는 공익기부에 대한 일정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미술품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시가 산정이 어려워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징수유예 외에 실질적인 감면 제도는 사실상 부재하다. 특히 등록된 미술관 자료에만 적용되는 징수유예 제도는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또한 기부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이 과도하고, 위반 시 추징 등의 리스크가 높아 기업이나 개인의 자발적인 문화재산 기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부 문화재 지정품에 대한 유증 시 비과세 제도가 존재하지만, 전체 미술품 기증과 상속에 대한 감면 체계로 보기는 어렵다.

외국의 상속세·증여세 감면 제도는 공익적 문화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는 공익단체나 국가에 미술품을 기부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한다. 둘째, 프랑스(‘Dation en paiement’), 영국(‘AIL’), 독일 등은 국가에 기부한 미술품으로 세금을 대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 셋째, 고액 미술품의 경우 감정평가 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며, 기부의 시점과 방식(생전·사후, 유언 등)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라진다. 넷째, 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 차등도 병행되며, 문화재 지정 여부에 따라 별도 감면이 적용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각국은 문화재의 공공 이전과 상속세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공익적 기부에 대해 폭넓은 상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문화예술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 시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상속세 징수유에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대상을 등록 미술관 자료 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증 및 사인증여를 통한 미술품 기부에 대한 실질적 감면이 가능하도록 세법 개정이 요구된다. 넷째, 사후관리 의무 완화와 과세 회피방지 규정의 현실화를 통해 기부자의 법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는 문화예술 분야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정당화되며, 궁극적으로는 기부문화 활성화와 문화자산의 국내 보존에 기여할 수 있다.

④ 부가가치세

한국의 문화예술 분야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는 공익성과 비영리성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현물 기부는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반면, 금전 기부는 비과세여서 동일한 기부 행위에도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둘째, 후원에 대가성이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순수 후원과 광고성 후원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여 창작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일정 매출 초과 시 오히려 과세전환 부담이 생긴다. 넷째, 면세 기준이 모호하고 주최자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져 과세의 중립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다. 이처럼 현행 제도는 기부·후원 유인을 떨어뜨리고, 예술단체의 세무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외국의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는 기부의 공익성, 수증기관의 자격, 대가성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문화예술 기부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첫째, 기부 자체는 대가성이 없을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 등은 미술품을 공익 목적의 비영리기관에 기부할 경우 이를 공급으로 보지 않거나 면세 대상으로 간주하여 소비세나 VAT가 부과되지 않는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도 국가나 공공기관에 기증한 미술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둘째, 대가성이 있는 후원은 과세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업이 후원을 통해 로고 노출, 광고, 명칭 사용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사실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는 프랑스, 독

일, 일본, 영국, 캐나다 등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셋째, 국가에 기증할 경우 별도 제도를 통해 세금 감면이 보장된다. 프랑스의 ‘Dation en paiement’, 영국의 ‘Acceptance in Lieu’ 등은 상속세를 미술품 기증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넷째, 문화재 지정 여부나 수증기관의 자격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탈리아는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만 면세를 인정하며, 독일은 박물관, 미술관 등 공익기관에의 기증만 면세 대상으로 본다.

개선방향으로는 실질적 기부·후원 장려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첫째, 현물 기부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거나 면세 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외국처럼 공익적 기증에 대해서는 공급으로 보지 않거나, 최소한 박물관·미술관 등 공익기관에 대한 기증은 과세 예외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후원과 광고성 거래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 로고 노출 등 제한적 대가 제공은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예술단체와 기업이 예측 가능하게 세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면세사업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제한을 완화하거나 대안적 공제방식을 도입해 창작 비용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예술인이나 단체에 한해 한시적 또는 정액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넷째, 문화예술 기부의 공익성과 수증기관의 성격에 따라 면세 요건을 세분화하고 명문화함으로써, 과세 여부의 자의적 해석을 줄이고 과세의 중립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은 부가가치세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예술기부와 창작활동을 실질적으로 장려하고, 예술단체의 자생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2) 기증이나 후원받는 측 문제점과 해결방안

현행 제도는 예술단체가 기증받은 자산이나 후원금을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성과 접근성에는 제약이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요건이 까다로워 많은 단체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세 감면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제도의 안정성이 부족하다. 또한, 기부금 수령 시 요구되는 공익목적 사용과 회계보고 등의 사후관리 의무는 예술단체에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여, 기부 유인을 저해하고 재정 자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미술품 기부 및 문화단체 관련 조세 감면 제도는 공익성, 비영리성, 대가성 유무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

에서는 미술품을 공익기관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하거나 감면 해주며, 이는 문화유산의 공공 이전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비영리 예술기관으로 등록된 단체는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되며, 기부자는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순수한 기부는 과세 대상이 아니나, 광고나 로고 노출 등 대가성이 수반될 경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는 구조이다. 아울러 기부를 받는 수증기관이 공공기관, 박물관, 미술관 등 일정한 공익적 자격을 갖추었는지가 면세 적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전반적으로 각국은 예술 진흥과 문화재 보존을 위해 기부와 후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요건을 병행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실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둘째, 지방세 감면 규정을 일몰제에서 상시 제도로 전환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기증자산의 공익목적 사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사후관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예술단체의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 나아가 예술단체가 기부금 수령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등록 요건과 공익단체 지위 인정 절차를 체계화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문화예술단체의 조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및 문화국가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미술품 관련 조세 범죄 문제

가. 최근의 미술시장의 분위기

미술시장의 성장과 함께 조세포탈 및 자금세탁행위는 더 이상 이론적 가능성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적인 법집행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술시장은 고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유통 경로가 불투명하며, 작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어 자금세탁, 탈세, 상속재산 은닉 등의 범죄에 악용되기 쉽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아왔으며, 세계적인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와 박물관장 마틴 로스 역시 예술시장의 범죄 취약성을 경고한 바 있다.

과거에는 미술시장을 통한 조세포탈이나 자금세탁이 국내에서 실제로 드러나

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향후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수록 수사기관의 관심과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다. 특히 EU와 같이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미술시장에 확대 적용하는 방향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행 협의의 조세포탈죄 규정만으로는 진화하는 기술과 글로벌 거래 구조에 대응하기 어렵고, 복잡한 역외탈세 구조에 맞춘 새로운 형사법적 대응체계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조세범죄에 대한 입증 기준을 차등화하고, 법원의 적극적인 해석과 입법자의 제도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조세 정의 실현이 가능하다.

결국 미술시장을 둘러싼 범죄 리스크는 단순한 거래 투명성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정책과 세제, 국제협력 전반에 걸친 복합적 과제로, 향후 과세당국뿐 아니라 사법기관과 입법기관 모두의 총체적 대응이 요구된다.

나. 조세포탈죄

1) 일반론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법정 세금을 포탈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를 받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명문화되어 있다. 이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아래에서 조세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사적 수단으로 기능하며, 일반적으로는 납세행위의 가장 본질적인 위법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 조세의 부과·징수를 방해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존재할 것, ▲ 그 행위로 인해 세액이 실제보다 낮게 확정되거나 환급 또는 공제가 발생할 것, ▲ 그 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나 착오를 넘어, 세액을 의도적으로 감경하거나 환급받기 위한 적극적인 기망이나 허위신고를 포함한다.

조세포탈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과세권’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며, 이는 조세가 국가재정의 핵심 기반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점에서 조세포탈죄는 사기죄와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에서 구별되는 독자적 범죄로 인정된다. 사기죄는 사인 간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조세포탈죄는 국가의 과세권이라는 공권력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목적이 전혀 다르다.

최근에는 고도화된 국제거래 및 역외탈세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포탈죄에 대한 입증기준을 차등화하고, 단순 과실이나 해석 차이를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특히 미술시장처럼 고

액 자산이 유통되고 가치 산정이 주관적인 분야에서는 조세포탈죄 적용 시 더욱 정밀한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이 요구된다.

따라서 조세포탈죄는 단순한 탈세를 넘어서 국가의 조세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며, 형사법, 조세법, 경제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에서 신중한 해석과 입법적 정비가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2) 유형과 사례

① 자산 은닉형 조세포탈

대표 사례: 세금 체납자의 미술품 구매

SBS 보도에 따르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인물이 현금다발을 보유한 채 미술품을 다량 매입하여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 회피를 시도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는 현금 추적을 어렵게 하고, 미술품이라는 고가 실물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전환·은폐함으로써 징수 회피를 도모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미술품은 가치 산정의 주관성과 거래의 비공개성이 높아 조세포탈 및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되기 쉽다.

② 역외탈세형 조세포탈

대표 사례: ‘완구왕’ 사건

피고인은 홍콩 법인의 이익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하고, 이 자금을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 1심은 피고인의 국내 조세 회피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고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조세 피난처와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대표적인 역외탈세 수법이다.

③ 양도소득 과소신고형 조세포탈

대표 사례: ‘벤처왕’ 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저가에 매도한 후, 이를 고가로 해외에 재매각하여 양도소득을 은폐한 것으로 의심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해외 법인의 실질 지배 여부와 공시된 계약의 존재 등을 근거로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과세 구조를 우회하려는 시도였지만 입증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다.

④ 불법 수익 은닉형 조세포탈

대표 사례: 불법 도박 수익 세탁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수백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장부를 일체 작성하지 않은 채 수익을 가상자산 등으로 은닉한 사건이다. 1심에서는 단순한 차명계좌 이용 및 미신고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반복성과 규모, 조직성 등을 종합해 조세포탈죄를 인정하였다. 이 사례는 불법소득을 제도권 밖으로 은닉하는 방식의 조세포탈 유형에 해당한다.

3) 쟁점

미술품은 고액 자산이며 유통 구조의 불투명성과 가치 평가의 주관성으로 인해 조세포탈의 수단으로 악용되기 쉬운 영역이다. 특히 자산 은닉, 탈세, 위법소득의 은폐, 그리고 국제적 역외탈세와 연결되며 조세범처벌법과 자금세탁방지 규제의 경계 지점에 놓인다. 이에 따라 미술품과 관련한 조세포탈죄에 있어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들이 주요하게 논의된다.

① 위법소득과 소득세포탈죄의 병존 여부

미술품을 매개로 한 배임, 횡령 등의 범죄로 발생한 위법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개인의 '기타소득'이나 '인정상여'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법인세 납부 의무와 별도로 해당 개인(예: 임원)에게 소득세 납부 의무가 부과되고, 소득세포탈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 예: 법인 임원이 회사 자금을 유용해 미술품을 매입하고, 이 금액이 인정상여로 처리될 경우 소득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음.

②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인정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미술품 거래에서는 이중장부 작성, 허위계약서 작성, 매매가 조작, 장부 미작성 등 수법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사기의 고의성과 적극적 은닉의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이는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어려운 쟁점으로 작용한다.

→ 완구왕 사건 2심에서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인정해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벤처왕 사건에서는 해외 법인의 실질 지배 입증 실패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③ 미술품 거래와 자금세탁행위의 중첩 여부

미술품 거래가 자금세탁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조세포탈 목적의 사실 은폐도 자금세탁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미술시장을 통한 현금의 자산 전환, 고가 미술품 구매 후 위장 전매, 허위 감정이 설정 등이 조세포탈과 동시에 자금세탁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 그러나 현재 한국 법상 갤러리, 경매인 등 미술시장 종사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보고의무자가 아니며, EU와 같은 강화된 규제가 부재하여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④ 역외탈세와 정보 비대칭 문제

조세포탈죄는 고의와 적극적 은닉행위 입증이 필수이나, 역외탈세의 경우 국내 과세당국이 해외 자산 및 거래 내역에 접근하기 어려워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페이퍼컴퍼니, 조세피난처 활용, 외화 자금의 차명 이전 등은 단순한 구조만으로는 처벌 근거가 되지 않으며, 실질 지배와 은닉 의도의 증명이 필수이다.

⑤ 신기술과 결합된 탈세 수단

NFT, 가상자산, 플랫폼 기반 소득 등의 활용은 미술품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조세포탈 유형을 양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술품을 NFT로 전환한 후 가상지갑을 이용해 거래하거나, 자녀 명의 법인을 통한 미술품 소득 귀속 등이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신고누락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하기 어려워 이러한 신종 탈세 유형에 대응이 미흡하다.

4) 외국의 경우

미술품은 고액의 가치, 거래의 비공개성, 자산 은닉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조세포탈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미술품을 이용한 조세포탈에 대해 별도의 감시 체계를 마련하거나 일반 조세범죄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아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관련 제도 현황이다.

① 미국

미국은 자진신고(self-assessment) 중심의 세제 시스템을 운영하며, 납세의무

위반 시 강력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고의적인 탈세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내국세법 §7201 등).

특히 미술품 거래에 대해 IRS(국세청)는 자산은닉 및 자금세탁의 잠재적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현금거래 감시, 미신고 거래에 대한 내부고발 보상제도 등을 통해 고위험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거래 및 미술품 기증과 관련해서도 상세한 보고의무가 부과된다.

② 영국

영국은 조세포탈에 대해 허위 신고자에게 납세 신용을 제한하는 ‘평생 블랙리스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단순 과태료를 넘어, 국세청(HMRC)으로부터 장기적으로 세무조사, 감면 배제, 금융거래 제약 등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미술품을 활용한 탈세가 의심될 경우에는 국세청의 실사가 이루어지며, 신고 누락분에 대해 가산세 부과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미술품의 상속·양도 시에도 정밀한 시가평가 및 신고 기준이 요구된다.

③ 프랑스

프랑스는 조세행정에서 납세자 권리보장을 명문화하면서도 탈세범죄에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미술품을 이용한 탈세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특히 문화재나 고미술품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경우 추가 과징금이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프랑스 국세청(DGFiP)은 고액 미술품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 및 외환조사를 병행하여 국제적 은닉 여부까지 추적하며,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갤러리와 경매업자에게도 특정 금융정보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④ 독일

독일은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협조 원칙(kooperative Steuerrecht)을 기반으로 세제를 운영하되, 고의적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미술품을 이용한 자산은닉이나 거래 조작이 확인되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하고, 형사법상 조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자산은닉을 목적으로 한 미술품 거래는 부가가치세(VAT) 탈루와 결합되어 수사 대상이 되며, 범죄수익환수법 등에 따라 압류 조치도 가능하다.

⑤ 일본

일본은 세무조사 체계를 엄격히 운영하며,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인 조세회피는 ‘부정경정’(不正更正)으로 분류되어 조세범죄로 처벌된다. 미술품 거래가 허위 계약, 차명소유, 거래가 조작 등을 통해 이뤄질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추징금, 가산세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된다.

미술품의 평가 및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회피도 중점 점검 대상이며, 외화거래와 연결된 미술품 수입이나 수출 시에도 자금 흐름에 대한 실질조사가 이루어진다.

5) 개선점

① 조세포탈죄 제재 규정의 다원화 및 이원화 도입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조세포탈죄를 인정하고 있어, 단순한 신고 누락이나 허위기재만으로는 형사처벌이 곤란한 구조이다. 특히 미술품 거래와 같이 고가 자산이 불투명하게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기망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포탈 행위를 경중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맞는 형사처벌을 차등화하는 제재 규정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단순 미신고나 누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상당의 벌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5배 벌금, 그리고 적극적 기망은 아니지만 허위 기재 등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원화 체계는 위법성의 정도에 비례한 합리적 처벌이 가능하게 하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② 입증책임 완화 및 거증책임 분담 구조 도입

역외탈세와 미술품을 통한 자산은닉의 경우, 과세당국이나 수사기관이 실질 지배자나 거래 구조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분리되고, 외국 페이퍼컴퍼니나 차명계좌가 동원되는 구조에서는 자금의 흐름이나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크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일정 요건 하에서 납세자에게 거증책임을 분담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명의자의 소득 수준과 자산 형성 내역, 거래 관계, 지배구조 등을 종합하여 실질 지배자가 누구인지 추정하고, 이에 대한 반증 책임을 납세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

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역외탈세나 미술품을 이용한 고도화된 포탈 수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③ 미신고 자체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 신설

현재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만 성립하므로, 단순한 고의적 미신고는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러나 미술품은 자산의 가치가 고액일 뿐 아니라 거래 기록이 비공개적이고, 은닉·세탁에 악용될 수 있는 특성이 강하므로, 일정 금액 이상의 미신고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고액 미신고죄’로 분리 규정하고 형법상 조세범과는 별도로 처벌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갤러리나 경매회사 등 미술시장 관련 사업자에게 고액 거래 내역의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도입될 경우 미술품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가 예술품을 이용한 조세포탈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 자금세탁

1) 일반론

자금세탁이란 범죄로부터 취득한 수익의 출처를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절차를 활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일련의 행위로 법적으로 정의된다. 미술품은 이러한 자금세탁 수단으로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고위험 자산군 중 하나이며, 실제로 국내외에서 미술품을 활용한 자금세탁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자금세탁의 대표적 구조는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배치(placement) 단계에서는 범죄수익을 현실 경제에 투입하며, 미술품 구매는 고액 현금 자산의 ‘세탁 입구’로 자주 사용된다. 둘째, 은닉(layering) 단계에서는 복잡한 거래구조, 위장된 거래 상대방, 복수 송장 및 허위 감정가 등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다. 셋째, 통합(integration) 단계에서는 세탁된 자금을 합법적인 자산이나 투자수익으로 환원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 구조 속에서 미술품은 가격 산정의 주관성, 현금 거래 가능성, 소유권 추적의 한계, 세제

혜택 등의 특성 때문에 모든 단계에 활용될 수 있는 자산이다.

미술품이 자금세탁에 적합한 이유는 명확하다. 고가 자산으로서 소액으로도 큰 자금 이전이 가능하며, 시장의 비공개성으로 인해 실제 소유자 파악이 어렵고, 감정가 조작을 통해 자산가치의 부풀리기 또는 축소도 가능하다. 또한 미술품 거래는 장부 기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국내 미술작품은 통관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국경 간 이동에 대한 감시도 어렵다. 국내에서는 화랑이나 경매회사 등 주요 시장 참여자들이 금융기관과 달리 자금세탁방지 보고의무의 직접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법·제도적으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자금세탁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미술품은 비금융자산으로 간주되어 직접적인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5천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만 금융기관이 보고 의무를 지는 구조이며, 미술품 거래자는 이러한 범위에서 제외된다. 반면, 미국은 BSA(은행비밀법), Patriot Act, 연방 형법(18 U.S.C. §1956) 등을 통해 미술품 거래가 의심될 경우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Art Loss Register나 FBI의 미술품 도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불법 작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영국 또한 자발적 보고 관행이 자리잡고 있어 미술시장에 대한 통제가 일정 부분 가능하다.

국제적으로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기준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9년 정회원으로 가입한 이래 관련 법제를 정비해왔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가 강화되었고, FIU(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 분석 및 보고 기능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미술품과 같은 비금융 고가 자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의 공백이 존재하며, FATF 권고에 따라 고위험 비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 보완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미술품은 자금세탁의 전형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도는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술시장 참여자에 대한 보고의무 확대, 고액 미술품 거래에 대한 실명제 및 감정 절차의 투명화,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강화 등이 향후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보완하는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2) 유형과 사례

미술품 자금세탁의 유형과 사례 정리

미술품은 고가의 자산이면서도 거래의 비공개성과 감정가의 유동성, 국제거래

의 자유로움 등으로 인해 자금세탁 수단으로 매우 적합한 자산으로 평가된다. 다음은 자금세탁에서 미술품이 활용되는 주요 유형과 구체적 국내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① 가치 과대평가형

작품의 감정가를 인위적으로 높여 불법자금을 유입시키는 방식이다. 예컨대, 실제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미술품을 매입한 후 해당 자금을 '정상적인 자산 거래'로 위장하는 것이다.

- 사례: 한 재벌 회장이 본인이 소유한 미술품을 자신이 설립한 아트펀드에 고가에 되팔아 12억 원의 차익을 남긴 사건이 대표적이다. 1심에서는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는 미술품 가치 산정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② 익명성 악용형

미술품 거래 시 구매자와 판매자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고, 특히 경매 및 화랑 거래에서는 차명·대리인 거래가 가능해 자금 추적이 어렵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감추고 합법적인 거래로 가장할 수 있다.

- 사례: 삼성그룹이 1,199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운용하고, 이 중 일부를 국제갤러리·서미갤러리를 통해 미술품(리히텐슈타인 등)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국제거래 악용형

해외 경매나 거래를 통해 자금을 국경 간에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외화 송금이나 수입 절차를 통해 자금세탁이 이뤄진다. 미술품은 국제 통관 시 신고가 미비하거나, 국내 작가의 작품은 통관기록조차 없어 이동 추적이 어렵다.

- 사례: 오리온그룹은 서미갤러리를 통해 고가 미술품을 해외에서 구입하고, 부동산 저가 매입과 연계하여 국내외 자금세탁을 시도했다. 해당 사건으로 서미갤러리 대표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④ 현금 사용형

미술품 거래는 고액 현금 거래가 흔하며, 공식적인 금융망 밖에서 자산이 이동하기 때문에 자금세탁에 용이하다. 이는 특히 불법도박, 마약자금 등의 현금성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데 활용된다.

- 사례: 2024년 부산지검은 온라인 불법도박 조직이 허위 미술품 경매를 통해

약 1,136억 원을 세탁한 사건을 적발하였다. 범죄수익으로 강남 빌딩, 슈퍼카, 고가 미술품이 확보되었고, 주요 범죄자들은 구속기소되었다.

⑤ 복잡한 거래구조형

중개인을 위장하거나 복수의 법인 및 계좌를 거쳐 거래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하는 방식이다. 허위 감정가, 복수 송장 작성, 계약 시차 조작 등이 동원된다.

• 사례: 신정아-변양균 사건에서는 미술품을 비롯한 자산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미술품 역시 자산은닉 및 몰수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미술품은 로비, 은닉, 자산보존의 매개로 활용되기 쉽다.

3) 쟁점

① 자금세탁 관련 법제의 적용 사각지대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기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미술시장 관련자(갤러리, 경매업자, 아트딜러 등)는 보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고액의 미술품 거래가 자금세탁에 악용되어도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당국의 감시 체계 밖에 놓이게 된다.

② 자금세탁 개념과 유형의 협소한 규정

자금세탁의 법적 정의는 ‘은닉, 가장, 수수’에 한정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레이어링(layering), 통합(integration)과 같은 다단계 세탁 수법은 포섭되지 못한다. 또한 조세포탈 목적의 자산 은닉이 자금세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③ 전제범죄 규정의 협소성

자금세탁죄는 특정 전제범죄가 존재해야만 성립되는데, 한국은 전제범죄 목록이 협소하고 포괄성이 떨어진다. 조직범죄, 환경범죄, 지식재산권 침해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범죄들이 빠져 있으며, 미술품 관련 범죄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④ 고위험 거래 분야에 대한 규제 미비

미술품, 귀금속, 고가 부동산 거래 등 고위험 자산 분야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도 일부 업종에만 한정되어 있다. 6천만 원 이상의 미술품 거래조차 법적 통제 밖에 있다.

⑤ 분산된 법령 구조와 제도적 비일관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어 법적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FIU, 검찰, 국세청 등 관련 기관 간 역할도 명확히 조율되어 있지 않다.

4) 외국의 경우

① 미국

미국은 자진신고 중심의 세제를 운영하면서, 미술품 거래가 자산은닉 및 자금 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고의적인 탈세가 적발될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만 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현금거래 감시와 미신고 거래에 대한 내부고발 보상제도 등을 활용하여 미술품 관련 탈세와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있다. IRS(국세청)는 미술품을 고위험 자산군으로 분류해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매업자나 갤러리 등 미술시장 참여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입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② 영국

영국은 2020년부터 미술품 거래자(Art Market Participants, AMP)를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여, 1만 유로 이상의 미술품 거래에 대해 고객확인(KYC)과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미술품 거래 시 허위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평생 블랙리스트에 올라 납세신용이 제한되며, 국세청(HMRC)의 실사와 가산세,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영국은 자발적 보고 문화가 정착되어 있으며, 미술시장을 고위험 산업군으로 간주해 철저한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③ 프랑스

프랑스는 세무조사와 납세자의 권리 보장을 엄격히 구분하면서도, 고의적인 조세포탈과 자금세탁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나 미술품을 악용한 조세 회피 행위가 발견될 경우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프랑스의 금융감독기관 Tracfin은 고가 미술품

거래에 대한 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매사 및 화랑 등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프랑스는 문화재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결합하여 미술품 시장의 불투명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④ 독일

독일은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협조를 강조하는 세정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고의적인 조세포탈이나 미술품을 이용한 자산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독일 자금세탁법(Geldwäschegesetz)에 따라 미술품 거래업자도 1만 유로 이상의 거래 시 고객확인 및 보고의무가 부과되며, 자금세탁방지 의무 대상으로 분류된다. 감정이 조작이나 복수 송장 작성 등 허위 거래계약을 통한 세금 회피 시 형사처벌 및 수익환수가 가능하며, 미술품은 세무조사의 중점 점검 대상 중 하나로 취급된다.

⑤ 일본

일본은 범죄수익이전방지법과 조세 관련 형법 규정을 통해 자금세탁 및 조세 범죄에 대응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매우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미술품 거래를 통한 조세 회피는 ‘부정경정(不正更正)’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조세포탈 정황이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과 가산세 부과는 물론 형사적 제재도 병행된다. 다만, 미술품 거래를 포함한 고위험 비금융 자산에 대한 실시간 보고체계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으며, 일본 역시 미술품 자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점차 모색하고 있다.

5) 개선점

① 미술시장 참여자에 대한 보고의무 확대

EU 사례처럼, 6천만 원 이상 미술품 거래를 수행하는 갤러리, 경매회사, 중개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상 보고의무자로 포함시켜야 한다. 고객확인(KYC), 의심거래보고(STR), 거래 기록보관 등의 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

② 자금세탁 개념 및 유형의 정비

자금세탁의 정의를 ‘범죄수익의 은닉·위장·합법화’로 확대하고, 레이어링(layering), 통합(integration), 후행적 수수 등 실제 수법을 반영한 유형을 범

에 명시해야 한다. 조세포탈 목적의 자산은닉도 자금세탁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

③ 전제범죄의 포괄적 확대

장기 4년 이상의 중대 범죄를 일괄 포함하는 방식으로 전제범죄를 확대하고, 조직범죄, 부패, 조세포탈, 환경범죄, 문화재·예술품 관련 범죄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④ 고위험 거래 감시 체계 도입

미술시장, 귀금속, 고가 부동산 등 고위험 거래 업종에 대해 고액 현금거래 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비정상적 거래에 대한 이상징후 탐지 기준과 의무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미술품 실명제, 감정가 등록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⑤ 통합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현재 분산된 법령을 통합해 단일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고, 관련 기관들의 권한과 의무, 보고 및 공유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한다. FIU의 분석기능 강화와 법집행기관과의 정보 연계 체계도 병행되어야 한다.

⑥ 비금융 전문가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자산 이전과 관련한 자문과 거래 구조 설계 과정에서 자금세탁에 개입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조건 하에 보고의무 및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⑦ 국제 공조 및 협약의 확대 적용

미술품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자산이므로, 소더비·크리스티 등 대형 경매사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유네스코(1970), UNIDROIT(1995) 협약을 자금세탁 방지 맥락으로 확대 해석 및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제 미술품 도난·자금세탁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도 강화되어야 한다.

4. 결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와 후원은 단순한 자선행위가 아니라, 공공성과 예술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기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현행 조세제도는 미술품 기증과 예술 후원에 대해 여전히 제한적인 세제지원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액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도 충분하지 않다. 특히 기부와 스폰서십을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한 현실은 기부자의 세제 혜택을 제약하고 수혜 단체의 재정자립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물납제도의 경우, 제도는 도입되었으나 심의기준의 불명확성과 감정평가의 부실, 시행령 부재 등으로 인해 실제 납세수단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문화예술 관련 기부를 일반 지정기부금으로만 분류하여 손금산입 한도를 10%로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기업 유인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차원의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예술 후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고액 기부에 대한 과감한 공제 한도 설정, 문화재 기증에 대한 감정제도와 인증 요건의 체계화, 상속세·증여세의 실질적 면제 등을 통해 문화예술 기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Dation 제도, 영국의 AIL 제도, 캐나다의 문화재 인증제도 등은 미술품을 활용한 공익적 자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해외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기부금 공제 대상과 방식의 유연화, △고액 기부에 대한 누적적 인센티브 도입, △문화예술 기부의 '특례기부금' 별도 분류, △상속세 물납제도의 현실화, △기부금 단체 지정요건의 합리적 완화, △문화업무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확대 등의 정책적 개선이 시급하다.

결국, 문화예술 분야의 조세제도는 단순한 세제 감면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과 문화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신뢰, 국가 정체성이라는 보다 넓은 맥락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조세제도는 공익적 기여에 대한 국가의 보상 메커니즘이자,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실현하는 간접적 통로로 기능해야 하며, '문화국가'로서의 헌법적 책무 이행을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작동해야 한다.

제19회 한국박물관국제학술대회

이지예술헌화연구회

2025년 정기학술회의 자료집

발 행 일 : 2025. 5. 17

발 행 인 : 심영옥

기획실무 : 김나영 간사

발 행 : 이지예술헌화연구회

E-mail ijimuhwa@gmail.com

※ 본 자료집은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의 지원으로 출판되었습니다.